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09

2025 SEPTEMBER

VOL. 105

경제가 선순환하고 나라의 기본이 튼튼해지도록,
국민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Theme Story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혁신으로 산업발전을 꾀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652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어벡플러스 | 02-2672-1535



재정 INSIGHT

- 04 특별기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 10 이달의 재정 VOCA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12 재정칼럼
2026년 예산안과 자원 배분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학회장
2026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
'초혁신', '민생', '안전'의 세 가지 축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학회장

재정 NOW

- 24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5년 7월 기준 재정동향
- 26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 36 재정 캘린더

재정 NAVIGATION

- 38 예술사 속 재정경제 이야기
귀족의 우아한 그림, 시민들의 진실한 그림
- 44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예산 항목의 역사적 진화
- 50 재정이 MONEY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물류,
이커머스 경쟁력의 핵심
- 54 플랫폼이 된 도시
파리와 오스만,
도시계획으로 도시를 발명하다
- 62 서울 남산공원의 여섯 위인
성재 이시영
- 64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FIS 재정

- 66 FIS 재정 알리미
FIS 재정도움센터
- 68 재정원 소식
- 70 애독자 코너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1 2026년 예산안 총량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선진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올해(1.5%)와 유사하게 예측하였고, 물가상승률은 2.1%로 올해(2.5%)보다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DI와 한국은행은 올해 0.8%에서 내년 1.6%, IMF는 0.8%에서 1.8%, 정부 역시 올해 0.9%에서 내년 1.8%로 전망하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2026년 예산안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의 마중물로 삼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 둘째, 경제 대혁신을 위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핵심 과제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셋째, 관행적·낭비성 지출 등 저성과 사업을 과감히 구조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도 함께 추진하였다.

2026년 총수입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5%(22.6조 원) 증가한 674.2조 원, 총지출은 8.1%(54.7조 원) 증가한 728.0조 원으로 편성하였다. 관리재정수지는 △109.0조 원 적자(GDP 대비 △4.0%)로 2025년 본예산 대비 적자 폭이 △35.1조 원 확대되며, 국가채무는 141.8조 원 증가한 1,415.2조 원(GDP 대비 51.6%)이다.

| 2026년 예산안 재정 총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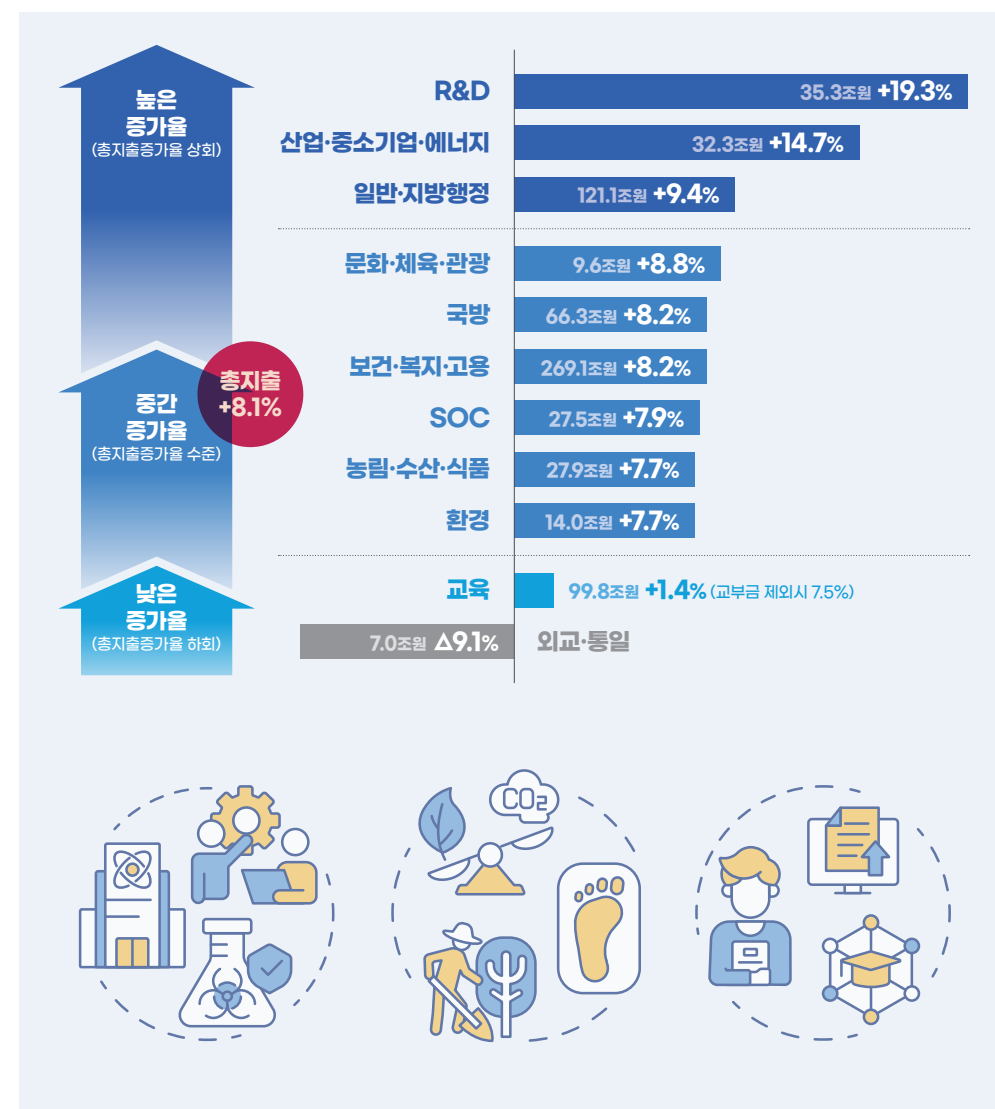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2회 추경		
■ 총수입	651.6	642.4	674.2	22.6
▸ 국세수입	382.4	372.1	390.2	7.8
▸ 세외수입	269.1	270.3	283.9	14.8
■ 총지출	673.3	703.3	728.0	54.7
▸ 예산	447.4	467.3	481.5	34.1
▸ 기금	225.9	235.9	246.5	20.6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21.7 △0.8	△60.8 △2.3	△53.8 △2.0	△32.1 △1.1%p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73.9 △2.8	△111.6 △4.2	△109.0 △4.0	△35.1 △1.2%p
■ 국가채무 (GDP 대비, %)	1,273.3 48.1	1,301.9 49.1	1,415.2 51.6	141.8 3.5%p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R&D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을 2025년 대비 각각 19.3%, 14.7% 확대하였다.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을 2025년 대비 8.2% 확대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 2026년 예산안 분야별 자원 배분 |



2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초혁신경제는 AI 전환(AI transformation)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의 체질을 혁신하는 국가 전략이다. 정부는 AI 3강 도약을 위해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본격 도입하는 등 총 10.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0.5조 원, 5년간 6조 원)를 집중한다. 또한, 'AX-Sprint 300' 사업(0.9조 원)을 통해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 물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접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적용한다. 한편, 고급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GPU 1.5만 장을 추가로 구매하는 등 AI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한다. 민간 수요 기반의 첨단기술 R&D를 통해 사업화 성과를 높이고,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첨단 인력 3.3만 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2025년 대비 +19.3% 증가)의 R&D 예산을 편성하였다. 신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을 출자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AI·딥테크 스타트업 175개사와 100억 원 이상 선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50개사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통상위기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1.9조 원 규모를 지원해 대미 관세 협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 관세 피해 기업 약 800개사에는 물류비, 피해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바우처를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최대 100만 원의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용자·보조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하였다.

3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정부는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방 성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회 안전망 강화 등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 우선, 0.9조 원을 투입하여 국립대를 지방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0.2조 원)해 지방의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자 한다.

아동·청년·어르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수당(만 7세 이하→만 8세 이하)과 아이돌봄(중위소득 200%→250%)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50만 원 한도)의 6·12%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여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늘리고(71억 원→777억 원) 노인 일자리를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촉촉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95.1만 원에서 207.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를 신설한다. 한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세사업장·건설 현장에 필수 안전시설·장비(추락 방호망, 고소 작업대, 스마트 안전장비 등) 지원을 1.1만 개소에서 1.7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건설·조선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일터지킴이 1,000명을 배치해 상시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4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재난·재해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우선,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5.5조 원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형 기상모델(27억 원)을 신규로 개발하고 수위관측소를 확충해 홍수 예보 정확도를 높인다. 호우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원을 0.9조 원에서 1.1조 원까지 확대하고, 맨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전국에 21만 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 피해자에게 긴급생활안정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위해 스마일센터도 확대 운영하는 등 범죄 피해를 받은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확대된 ODA는 성과를 점검해 국익 중심의 실용적 ODA로 개편한다. 우리 산업 현장의 수요와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 인재를 양성(68억 원)하고, 철도차량 공급·랜드마크 건설 등 양자 차관도 1.4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인도적 지원(6,775억 원→3,315억 원)과 국제기구 재량분담금(3,833억 원→2,807억 원) 등의 사업은 정상화한다.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해 민생·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전투기·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안보도 튼튼히 한다. 첨단 군대 육성을 위해 보라매(KF-21)의 개발과 양산을 지원(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포함, 1.3조 원→2.4조 원)하고, 첨단 방산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에 발굴·육성하는 등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틀도 마련(0.3조 원→0.5조 원)한다.

5 재정 제도 혁신

지금까지 설명한 핵심 과제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제도의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가장 먼저, 인구감소·지역낙후도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을 우대하는 원칙을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을 인상하거나 사업 물량을 추가 배분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한다. 지역 여건 맞춤형 사업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도 2025년 3.8조 원에서 2026년 10.6조 원으로 약 3배 대폭 확대한다. 한편, 출연연구기관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1,800개 이상의 소규모 수탁과제를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 과제 100개에 투자를 집중한다.

6 맺음말

2026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결과물이자, 경제의 회복·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마중물이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 노력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혁신을 지속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이달의 재정 VOCA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현대국가에서 조세는 정부 재정활동의 주요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조세의 수준은 '조세부담률'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뿐 아니라 공적연금과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국민 부담 수준을 제시하는 지표입니다.

조세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수입(국세+지방세)이 국민경제(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측정한 값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조세수입의 절대액이 아닌 해당 조세수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형태로 표현됨에 따라 국가별 비교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다만, 국민

개개인의 조세부담률은 개인의 소득 수준, 소비 행태, 재산보유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text{조세부담률} = \frac{\text{조세(국세+지방세)}}{\text{경상 GDP}} \times 100$$

국민부담률이란?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산한 개념에 해당하며, 조세수입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경제(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측정한 값입니다. 국민부담률에 포함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여금으로 구성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국민부담률 지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text{국민부담률} = \frac{\text{조세+사회보장기여금}}{\text{경상 GDP}} \times 100$$

국제비교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재정의 규모를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관점에서 파악한 지표로,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가별 재정 및 경제 현황을 비교·분석할 때 국가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지표를 활용¹⁾합니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1990년 30.9%에서 2023년에는 33.9%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²⁾은 1990년 18.6%에서 2023년 28.9%³⁾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성숙과 함께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OECD 주요국 국민부담률 추이: 1990~2023년

(단위: % of GDP)

	1990	2000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캐나다	35.1	34.7	31.0	32.8	34.5	34.8	33.8	34.8
프랑스	41.5	43.7	42.2	45.4	45.2	45.1	45.8	43.8
독일	34.8	36.4	35.9	38.1	38.7	39.8	39.6	38.1
이탈리아	36.3	40.5	41.7	43.0	42.6	42.5	42.8	42.8
일본	27.7	25.3	26.2	30.2	32.9	33.9	34.4	-
한국	18.6	20.9	22.4	23.7	27.7	29.8	32.0	28.9
영국	32.9	32.7	32.0	31.9	32.8	34.2	35.4	35.3
미국	26.0	28.3	23.4	26.1	25.6	26.7	27.6	25.2
G7 평균	33.5	34.5	33.2	35.3	36.0	36.7	37.1	36.7
OECD 평균	30.9	32.9	31.5	32.9	33.5	34.1	34.0	33.9

자료: OECD Data Explorer-A comparative table of tax revenues for Revenue Statistics in OECD member countries(<http://data-explorer.oecd.org/> 2025.7.22. update 통계 기준, 2025.9.5. 접속)

- 1) OECD는 국민부담률을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tax-to-GDP ratios)로 표기하고, 조세부담률은 Total 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s percentage of GDP로 표기함
- 2) OECD, A comparative table of tax revenues for Revenue Statistics in OECD member countries, ((<http://data-explorer.oecd.org/> 2025.7.22. update 통계 기준)
- 3) OECD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2023년 국민부담률은 구계열(기준연도 2015년) 기준이며, 2020년 기준년 개편에 따른 신계열 GDP를 반영할 경우 우리나라의 2023년 국민부담률은 26.8%

한국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2020년 신계열 GDP 기준)

(단위: % of GDP)

	2020	2021	2022	2023
조세부담률	18.8	20.6	22.1	19.0
국민부담률	26.2	27.9	29.7	26.8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8.



2026년 예산안과 자원 배분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학회장

낮은 경제성장률과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2026년 총지출 규모 8.1% 증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과 성과 중심 재정운용 제시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국민안정, 국익 중심 외교 안보 등 중점 투자
스마트한 사업 설계 바탕으로 꼼꼼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침체된 경기상황과 국제적 공급망 재구축 대응으로 재량지출 10.3% 증가
- 보건·복지·고용 분야 8.2%, R&D 분야 19.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7% 증가
- 포괄 보조금 규모 확대, 초광역권 사업 인센티브 부여로 지방 사회서비스 개선 정책 방향 설정



들어가며

지난 8월,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현재 및 미래의 경제사회 변화상황 등을 감안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6년은 미국의 관세충격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성장과 교역 둔화가 예상된다. 이런 환경에서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AI·디지털·탄소중립 전환 등 기술 및 산업환경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과 사회보장부담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국민 생활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 총지출 규모는 7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54.7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2025년 증가율인 2.5%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2025년 0.8%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과 여전한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기본방향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고성장에 집중투자 하며, 저성과 부문은 구조조정을 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제시하고 있다.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정,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설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배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배분, 지출 분야별 배분, 지방과의 배분 등의 관점에서 예산안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량과 미래세대와의 배분

총지출 증가율 8.1%는 2025년 0.8%로 낮아진 경제성장률(전망)에 대한 대응으로 경기진작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회복과 장기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1.8%로 예상되어 KDI의 잠재성장률 전망 1% 후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확장적 재정 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GDP 대비 -4.0%로, 흑자 상태지만 미래 지출이 예정된 사회보장성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0%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2025년(2회 추경 기준) 각각 -4.2%, -2.3%에 비해 소폭 개선된 수치다. 2025년과 2026년 예상 경제성장률이 각각 0.8%, 1.6~1.8%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수지 개선 정도는 크지 않다.

미래세대와의 재정 배분 관점은 재정수지의 변화와 국가채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4.0%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9년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통합재정수지 역시 -2.0%(2026년)에서 소폭 악화된 -2.1%(202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제시되었다. 국가채무는 2025년 GDP 대비 49.1%(추경 기준)에서 51.6%(2026년)로 증가하며 2029년에는 58.0%에 이를 전망이다. 향후 중기시계에서도 유지되는 상당 폭의 재정수지 적자는 미래세대와의 재정 배분 측면에서 부담이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시기에는 미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세대와의 자원 배분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연계된 재정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배분

2026년 총지출 728.0조 원 중에서 법률 등으로 규정된 의무지출은 388.0조 원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량지출은 340.0조 원(46.7%)을 점하고 있다. 2025년 본예산에서 각각의 비중인 54.2%, 45.8%인 것에 비해 의무지출 비중이 줄어든 결과다. 이는 2026년 재량지출 증가율이 10.3%(31.7조 원)로 의무지출의 6.3%(23조 원)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침체된 경기상황과 국제적 공급망 재구축 등에 대응한 일시적 정책수요가 높은 재량지출 증가율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재량지출 비율 증가는 향후 경기 호전 시 지출구조조정에 유리한 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상 경제성장률에 비해 다소 높은 지출증가율이 설정된 점을 감안하면 6.3%의 높은 의무지출 증가는 향후 재정운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무지출에 대한 체계적 평가 등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자원 배분

분야별 자원 배분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R&D, 산업·중소·에너지,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이다. 예산증가율이 전체 평균(8.1%)을 상회하거나 증가액이 큰 분야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예산 규모 269.1조 원으로 가장 큰 분야임에도 전년 대비 8.2%(20.4조 원) 증가하였다. 사회안전망 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 그리고 공공의료 투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은퇴 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 지출액(국민연금 48.4조 원→54.5조 원), 기초연금 지출액(21.8조 원→23.4조 원) 증가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아동수당 대상 확대, 돌봄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초고령사회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 증가로 판단된다.

한편, 고용 분야에서 고령자의 소득 지원을 위해 노인 직접일자리를 기존 110만 개에서 2026년 115만 개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은 경기 불황 시에 사용하는 임시적 대책에 가까우므로 경기회복 시에는 직접일자리 확대보다는 민간 일자리로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R&D 분야는 예산 규모 3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3%(5.7조 원)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한 과학기술·통신 분야가 1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하였다.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이 그 요인이다. 소재부품기술개발 등을 포함하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도 8.8조 원으로 1.6조 원 증가하였다.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생산기지 확보와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이다.

다만 OECD(2025)¹⁾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과 민간 R&D를 위한 조세 지원 수준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1.49%로, OECD 국가 중 일본(1.76%)에 이은 2위 수준에 이르고 있고 OECD 평균 0.87%(2022), EU 평균(0.8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²⁾.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향후 R&D 분야에서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의 집행 효율화가 중요하다.

예산집행의 효율화 관점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 기초연구 사업은 지방 및 신진연구자의 연구지속성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성과창출이라는 R&D의 기본 목적 아래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2026년 예산 규모가 32.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4.1조 원)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혁신지원이 8.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조 원 증가하였다. 첨단·주력산업 고도화, 소부장 공급망 안정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분야도 1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0.9조 원 증가하였다. 소상공인 용자지원,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도 에너지 전환 및 분산형전력망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0.5조 원 증액된 5.1조 원 배정되었다. 국가발전에 필수인 산업기반의 확보, 환경친화적이며 안정적 에너지망 구축 등을 위해 시급한 예산 배분으로 판단된다.

표 01 분야별 자원 배분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지출	673.3	728	54.7	8.1
1. 보건·복지고용	248.7	269.1	20.4	8.2
2. 교육 (교부금 제외)	98.5	99.8	1.4	1.4
	26.2	28.2	2.0	7.5
3. 문화·체육·관광	8.8	9.6	0.8	8.8
4. 환경	13.0	14.0	1.0	7.7
5. R&D	29.6	35.3	5.7	19.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2.3	4.1	14.7
7. SOC	25.4	27.5	2.0	7.9
8. 농림·수산·식품	25.9	27.9	2.0	7.7
9. 국방	61.2	66.3	5.1	8.2
10. 외교·통일	7.7	7.0	-0.7	-9.1
11. 공공질서·안전	25.0	27.2	2.2	8.8
12. 일반지방행정 (교부금 제외)	110.7	121.1	10.4	9.4
	43.6	51.7	8.1	18.6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2025.8

1) OECD database(2025.09.02.), Government budgets for R&D and tax incentive support for business R&D.

2) 아이슬란드(1.48%), 독일(1.06%), 프랑스(0.99%, 2021), 스위스(0.98%), 영국(0.91%, 2022)

지방에 대한 자원 배분

2026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재정사업에 지역발전 정도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발전 정도를 고려하는 제도다. 또한 자율적 예산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 보조금 규모를 확대(3.8조 원→10.6조 원)하고 초광역권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지방발전이라는 실현 가능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밀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세분된 재정 차별화는 나눠 먹기식의 재정 배분으로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유도하기 어렵다. 광역지역에 기반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의 자족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구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마치며

침체된 경제 상황과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상당히 높은 증가율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시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감안할 때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량지출 중심의 예산 증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운영 노력도 바람직하다.

다만, 재정정책의 효과는 그 규모와 구성에도 의존하지만 개별사업의 효과성에도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공공자금이 가질 수 있는 책임성 부재로 인한 사업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한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꼼꼼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재정사업이 특정 이익집단의 기득권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 '초혁신', '민생', '안전'의 세 가지 축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학회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6년 예산안은 복합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으로 패러다임 전환
고성과 부문에 자원 집중 투자,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의 성과 중심 재정운용
2025년 예산대비 총지출은 8.1%하였으며 외교·통일 분야 제외 전 분야 예산 증액
특히 R&D를 통한 기술혁신으로 산업발전을 꾀해 경제성장 유도 정책

- AI 대전환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추진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과 지역 균형발전, 저출생 극복과 초고령 사회에 대비
- 첨단 기술 도입으로 재난 관리 및 재해 예측과 대응 역량 강화



1. 적극재정을 통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

2026년 대한민국 예산안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 관세 충격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의 강력한 확장 재정 의지를 반영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회복'을 넘어, 구조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총지출은 2025년 본예산(673.3조 원) 대비 8.1% 증가한 728.0조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증가율(2.5%)의 세 배 이상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많은 지표가 낮은 성장률과 둔화하는 고용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도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존의 '건전재정 긴축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재정'으로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다. 이는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고성과 부문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불필요한 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 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지속가능 재정'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명확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2. 2026 예산안 분야별 자원 배분 현황과 특징

<표 1>에서 보듯이 2026년 예산안의 경우 총지출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0조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전체 예산안의 39.96%인 269.1조 원, 다음으로는 일반·지방행정이 121.1조 원(16.63%), 교육 99.8조 원(13.71%)순이다. 하지만 일반·지방행정과 교육 부분은 교부금을 제외하면 7.1%와 3.87%로 일반 지방행정은 국방보다 적고, 교육은 6번째이다.

표 01 2026 예산안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단위 : 조원, %)

구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
		(비중)		(비중)		
총지출	673.3	100.00	728.0	100.00	54.7	8.1
보건·복지·고용	248.7	36.94	269.1	39.96	20.4	8.2
일반·지방행정	110.7	16.44	121.1	16.63	10.4	9.4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43.6	6.48	51.7	7.10	8.1	18.6
교육	98.5	14.63	99.8	13.71	1.4	1.4
교육(교부금 제외)	26.2	3.89	28.2	3.87	2.0	7.5
국방	61.2	9.09	66.3	9.11	5.0	8.2
R&D	29.6	4.40	35.3	4.85	5.7	19.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4.19	32.3	4.44	4.1	14.7
농림·수산·식품	25.9	3.85	27.9	3.83	2.0	7.7
SOC	25.4	3.77	27.5	3.78	2.0	7.9
공공질서·안전	25.0	3.71	27.2	3.74	2.2	8.8
환경	13.0	1.93	14.0	1.92	1.0	7.7
문화·체육·관광	8.8	1.31	9.6	1.32	0.8	8.8
외교·통일	7.7	1.14	7.0	0.96	-0.7	-9.1

전체 지출예산이 전년 대비 8.1% 증가함에 따라 외교·통일·분야(0.7조, -9.1%)를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
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주목할 분야는 R&D 분야 예산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R&D
분야는 19.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4.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
이 R&D를 통한 기술혁신으로 산업발전을 꾀해 경제성장을 가져오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체 증가율인 8.1%보다 일반·지방행정 분야(9.4%), 공공질서·안전(8.8%), 문화·체육·관광 분야(8.8%)가
증가 추세를 보여서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과 K-콘텐츠 산업 등 문화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전체 예산액 대비 분야별 비중의 순위는 2025년과 차이가 없지만, R&D의 경우 0.45%p 증가한 4.8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0.25%p 증가한 4.44%로 분야별 비중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3.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초혁신’, ‘민생’, ‘안전’의 세 가지 축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구축: AI와 R&D의 대전환

2026년 예산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AI 대전환’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다. AI 분야 예산
은 202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1조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산업, 생활, 공공
전반에 걸쳐 적용하는 ‘AX(AI Transformation)’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와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의 AI 적용을 지원하는
‘AX-Sprint 300’ 사업에 0.9조 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한국 AI 산업이 응용 소프트웨어에 편중되고
원천기술 및 하드웨어 분야가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인재 양성
규모를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GPU는 5만 장 조기 확보를 추진하는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도 막대한 예산
이 배정되었다. 또한,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과 모태펀드 출자 확대를 통해 미래전략산
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역시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다. 2026년 R&D 예산은 역대 최대 증가율인
19.3%를 기록하며 35.3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소규모 파편화된 출연연구기관의 PBS(과제별 연구비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임무 중심’의 대규모 융합 연구 체제(ISD)로 전환하여 1,877개의 과제를 100
개의 대형 과제로 통합한 결과다. 이 정책은 과거의 ‘나눠주기식’ 예산 집행 관행을 혁파하고, 명확한 성과
목표를 제시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다. 급격한 변화가 연구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첨단 핵심 기술 개발에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민생 안정과 사회적 약자 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한 예산도 144조 원에서 175조 원으로 약 22%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민생 안정 정책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을 월 207.8만 원으로 올렸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및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과 같은 직접적인 생필
품 지원까지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축을 이룬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4극 3특(4
Poles, 3 Specials)’이라는 새로운 공간 전략을 통해 각 지역의 특화 산업(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을
AI 기술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러한 정책은 과거의 분산형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하고, 비
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
을 구축하고자 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재해·범죄 대응과 첨단 국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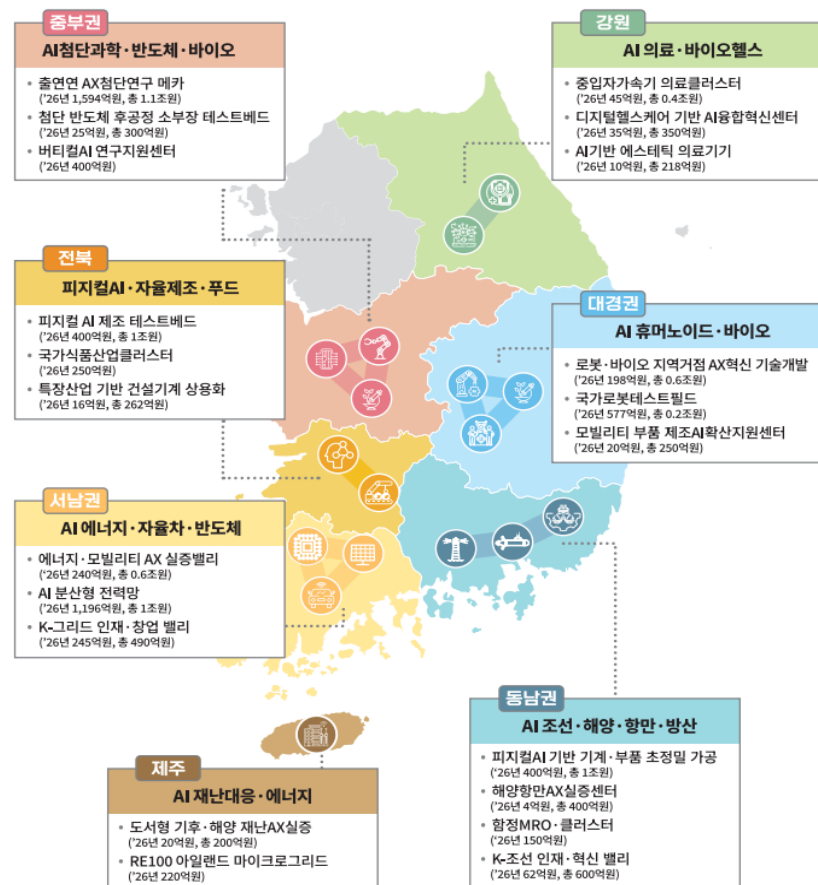
이번 예산안은 기후변화와 신종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모든 상습 침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아파트에

화재 연기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재해 예방 인프라를 내실화했다. 또한, AI 기반 홍수 예보 및 드론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과 같은 첨단 기술을 재난 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재해 예측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생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 사칭 피싱’을 막기 위한 발신 정보 알림 시스템과 과태료 고지서에 QR코드를 도입하여 민원 편의를 높이는 사업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업들이 신설되었다. 특히, 병사의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폭발물·지뢰 제거 로봇의 양산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군 복무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정책적 배려를 보여준다.

국방 분야 예산은 2025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이는 북한의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첨단 국방 기술을 산업화하겠다는 전략을 반영한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인 KF-21의 양산과 더불어 차세대 스텔스

그림 01 4극 3특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



※지역거점 대학 육성, 인력양성, 규제완화 등과 연계하여 지원

전투기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AI, 드론, 로봇 등 미래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를 넘어 ‘K-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첨단 국방’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집행의 질과 성과 관리,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병행 필요

2026년 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성장 잠재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편성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경기 관리자를 넘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민간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적 설계자’로 진화해야 한다. 현재의 확장 재정은 과거의 재정운용 기조를 탈피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AI와 R&D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예산안의 투자 방향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6년 예산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정부의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예산안에 담긴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재원의 규모에 있지 않다. 대규모 투자가 실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효과가 기업의 투자 증진과 수출 확대, 고용 확대로 이어져 세입도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AI, R&D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민관 협력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과 시장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투자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R&D를 통한 단기적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기술사업화가 단기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고려하여 다각화를 통해 산업 분야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기초연구에 대한 과감한 지원, 그리고 수월성에 근거한 과학기술 분야 지원, 단순 사업비 증액이 아닌 관련 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투자의 효과를 위해서는 분야별 투자 계획의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유연한 집행과 엄격한 성과 관리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성과지향 예산을 정착시키고, 중기적 채무·수지 경로를 일관되게 준수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확대 재정 투자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가는 마중물로 작동하여 대한민국 성장의 도약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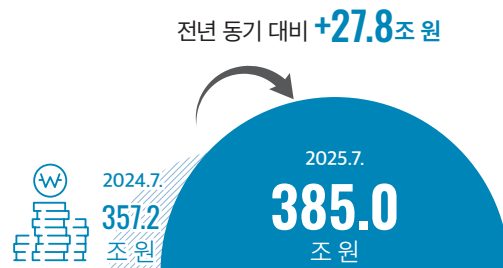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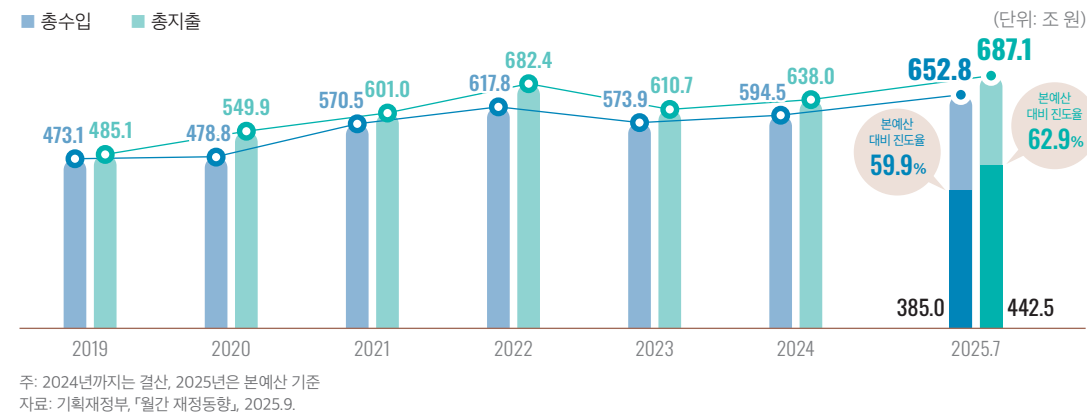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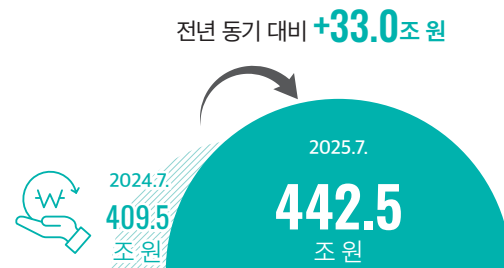
2025년 7월 기준

총수입·총지출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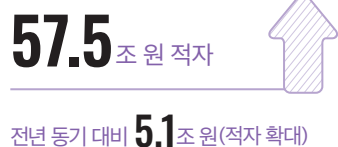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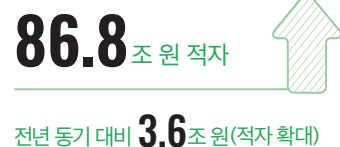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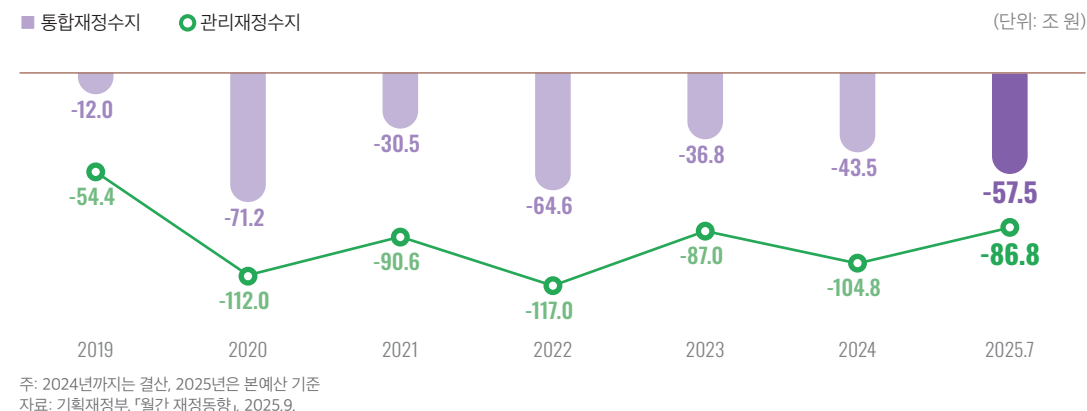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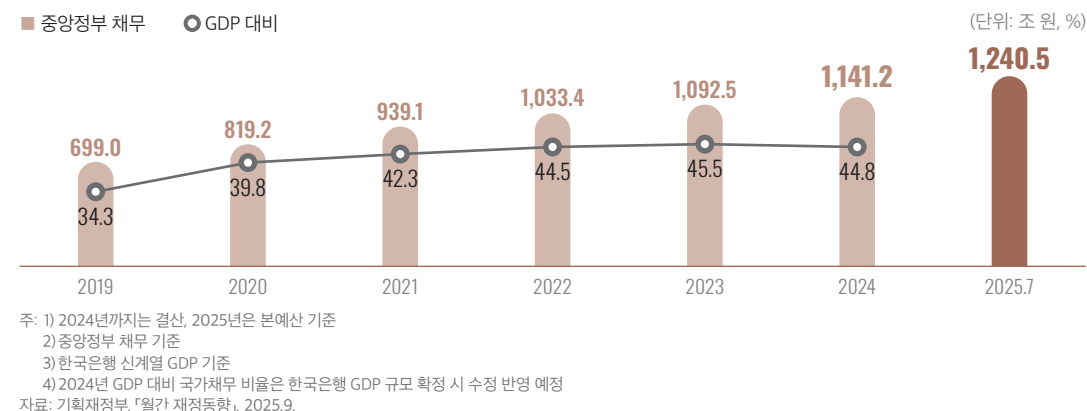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9.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주요국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	총지출 ⋮	수지 ⋮
미국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0개월 차)	규모	4조 3,466억 달러	5조 9,752억 달러	1조 6,285억 달러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6.4%	6.7%	7.4%
독일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2,435억 유로	2,771억 유로	336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6.2%	-7.5%	-16.0%
일본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10조 7,116억 엔	36조 5,325억 엔	25조 8,209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21.6%	4.2%	20.6%
프랑스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1,982억 유로	3,131억 유로	1,149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6.0%	-1.1%	-11.4%
영국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3,868억 파운드	4,467억 파운드	600억 파운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7.2%	7.9%	12.7%
대한민국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7개월 차)	규모	385.0조 원	442.5조 원	57.5조 원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7.8%	8.1%	9.8%

**자료 :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July 2025(8.12. 발표)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July 2025(8.21.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8.20.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 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 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 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juillet 2025(9.2.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July 2025(8.21. 발표)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 미국

- 의회예산처, 관세 인상으로 10년간 재정적자 최대 4조 달러 감소 전망
- 파월 연준의장, 금리정책 조정 시사
- 한미 정상회담 개최
- 트럼프 행정부, 인도에 50% 관세 적용 개시

2 | 독일

- 통계청,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3% 감소 발표
- 독일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장기 국채 금리 급등

3 | 일본

- 내각부, 2025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1.0% 증가 발표
- 2026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서 국채원리금 상환 비용으로 32.4조 엔 예상

4 | 프랑스

- 총리, 마-EU 무역협정에 비판
- 2025년 7월 프랑스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2% 상승 발표

5 | 영국

- 통계청, 2025년 2분기(4~6월) GDP 추정치 발표
-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 발표
- 정부의 차입비용, 27년 만에 최고치 근접

6 | 중국

- 국채 및 금융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 재개
- 중국 재정부, 1~7월 재정 동향 발표

국제기구

1 | IMF

- “부동산 호황과 생산성 성장(Housing Booms and Productivity Growth)” 워킹 페이퍼 발간
- “아시아의 중기 성장 전망 분석(Dissecting Medium-Term Growth Prospects for Asia)” 워킹 페이퍼 발간

2 | OECD

- “2025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 2025)” 보고서 발간
- “2025 조세정책 개혁(Tax Policy Reforms 2025)” 보고서 발간

주요국

미국

8.22. 의회예산처, 관세 인상으로 10년간 재정적자 최대 4조 달러 감소 전망¹⁾²⁾

- 미 의회예산처(CB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최대 4조 달러(약 5,539조 원)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재전망

*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미국 의회의 입법보조 기관으로 국가 경제와 예산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

- 현 세율이 2035년까지 지속될 시, 3.3조 달러 세수 증가 및 7,000억 달러의 이자 지급액 감소
- 6월 보고서(1~5월 관세율 반영)에서는 2.5조 달러 재정적자 감소 및 5,000억 달러 이자 지급액 감소 전망

8.22. 파월 미 연준의장, 금리정책 조정 시사³⁾

- 파월 미 연준의장은 연례행사인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 발표
 - 고용시장은 고용 수요와 공급이 함께 둔화해 만들어진 “특이한 균형(curious kind of balance)”을 이루고 있다며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 증가 경고
 - “최근 관세 인상이 소비자물가를 올리기 시작했다”며 인플레이션의 단기적 상방 리스크 언급
 - 다만 관세 효과가 일시적 가격 상승인지, 지속적 인플레이션인지 불확실하다고 평가
- “실업률과 고용시장 지표가 안정되어, 정책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금리 정책 조정을 시사
 - 그러나 현 통화정책이 제약적인 수준임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금리 조정은 경제여건 및 리스크 균형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될 것임을 밝힘

8.26. 한·미 정상회담 개최⁴⁾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에서 성사
 - 소인수 회담·언론 질의응답·오찬 회담(비공개) 형식으로 진행
-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제조업 부흥을 위한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 의지 표명

1) <https://www.cbo.gov/publication/61697>

2)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s-tariffs-could-reduce-us-deficit-by-4-trillion-cbo-estimates-2025-08-22/>

3)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powell20250822a.htm>

4) <https://www.bbc.com/news/articles/cy5pdgl64zo>

독일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 단계적 증액 합의, 5년간 약 250억 달러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협의 진행 중(9.2 기준)⁵⁾⁶⁾

- 2026 국방비 예산은 약 68.3조 원(GDP 대비 약 2.4%)으로, 3.5%로 상향 시 약 30조 원 추가 필요
- NATO 국방비 증액 합의*와 유사한 맥락이나 NATO처럼 목표 달성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5% 국방비 증액: 3.5%는 국방비, 1.5%는 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사용

8.27. 트럼프 행정부, 인도에 50% 관세 적용 개시⁷⁾⁸⁾

- 8월 27일 인도산 제품(의류·주얼리·기계 등)에 최대 50% 관세 부과 시작(주요국 중 최고 수준)
 - 러시아 원유·무기 수입에 따른 경제·안보 압박, 상호 관세 25%에 보복성 관세 25% 추가
 - 일부 교역품·인도적 지원 물품은 면제
- 미국·인도 간 외교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 예상
- 인도는 대미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중국과 국경 무역 재개 합의(7년 만에 정상급 교류)

8.22. 통계청,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⁹⁾

- 제조업과 건설업이 예상보다 부진했으며, 가계지출도 약간 늘었으나 잠정치보다 낮은 수준
 - 자본투자 -1.9%, 건설업 -2.1%, 상품 및 서비스 수출 -0.1%로 전 분기 대비 모두 하락
 - 정부지출은 전 분기 대비 0.8% 늘었으나, 가계지출은 0.1% 증가에 불과
 - 유럽연합(EU) 평균 0.2%보다 낮고, 스페인(0.7%), 프랑스(0.3%), 이탈리아(-0.1%) 등 주요국 보다는 낮은 수준
- 독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확장적 재정 운용과 구조개혁을 강조
 - 엄격한 부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1조 유로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 성장 효과 기대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유연화, 행정절차 간소화, 에너지 가격 인하 등 구조적 개혁 필요

5) <https://www.donga.com/en/article/all/20250902/5822053/1>

6)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defense/20250902/korea-us-yet-to-finalize-talks-over-seouls-defense-spending-hike-defense-official>

7) <https://www.reuters.com/world/india/trumps-doubling-tariffs-hits-india-damaging-ties-2025-08-27/>

8)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aug/27/trump-tariff-india-russian-oil-purchase>

9) <https://www.ft.com/content/a4d2660f-311f-4281-895c-c95274234a7f>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economy-shrank-03-second-quarter-us-tariffs-slowed-exports-2025-08-22/>

일본

8.28. 독일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장기 국채 금리 급등¹⁰⁾

-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이 관측
 -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1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 3.31%로 마감했으며, 10년물 금리도 2.75~2.76% 수준까지 상승
 - 유럽 주요국인 프랑스는 4.42%로 마감, 영국은 장 초반 5.64%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은 재정 확대와 글로벌 불확실성 및 수요 감소에 기인
 - 독일 정부는 국방 및 인프라 지출 확대를 위한 채권 발행이 금리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
 - 일본과 같은 외국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이 유럽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시장에서 독일 국채가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라는 평가가 약해지면서 투자자 수요가 위축되어 금리 상승 가속화

8.15. 내각부, 2025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1.0% 증가 발표¹¹⁾

- 2025년 2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전기 대비 0.3%, 연이율로 환산하면 1.0%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인 0.4%보다 크게 상회
 -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2% 증가하여 예측(0.1%)보다 다소 높은 수준
 - 설비투자는 1.3% 상승하여 예상치인 0.5%를 크게 웃돌아 성장을 견인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직전에 자동차 수출 급증 효과가 반영되어 순 수출이 성장에 0.3%p 기여
- 정부는 2025 회계연도 성장을 전망치를 1.2%에서 0.7%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시장은 금리 인상 기대확산으로 반응
 - 2분기의 수출 호조는 미국의 고율 관세 발효 직전에 자동차 업체들이 서둘러 선적한 수요 급증에 따른 일시적 요인
 - 민간 소비 회복, 소비자 심리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경제 회복이 가능하며, 미국의 통상 정책에 따른 리스크를 주의할 필요
 - 금융시장에서는 엔화 강세와 함께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

10)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bruised-bond-markets-turbulence-persists-debt-sales-ramp-up-again-2025-08-28/>

11) <https://www.reuters.com/business/japan-posts-unexpectedly-strong-gdp-helped-by-resilient-exports-2025-08-15/>

프랑스

8.26. 2026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서 국채원리금 상환 비용으로 32.4조 엔 예상¹²⁾

- 2025년도 국채원리금 상환액(28.2조 엔)보다 약 14.8% 증가한 것으로 2026년도 국가 예산의 약 4분의 1 규모
 - 이자 비용은 13.4조 엔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준
 - 최근 장기 금리 상승을 반영하여 이자 지출을 산정하기 위한 예상 금리를 2025년 2.0%에서 2026년 2.6%로 상향
- 장기 금리의 상승과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관측이 국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장기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신규 발행뿐 아니라 기존 국채의 차환 비용도 증가하여 재정 지출가능성에 부담
 - 일본은행(BOJ)은 올해 1월 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0.5%로 인상한 이후 동결 상태를 유지했으나, 물가 상승세로 시장에서는 이르면 10월에 기준금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

7.28. 총리, 미-EU 무역협정에 비판¹³⁾¹⁴⁾

-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EU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미국-EU 간 무역협정 체결 후, “미국에 굴복한 어두운 날”이라며 비판
 - ‘국민당’(Rassemblement National party, RN), ‘사회당’(Parti Socialiste, PS) 등 프랑스의 야당 역시 미국-EU 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강력히 비판
- 한편, 미국과의 관계에서 회유적인 방식을 강조한 독일-이탈리아와 달리, 프랑스는 그동안 EU 협상단에게 보다 강경한 입장을 촉구

8.14. 2025년 7월 프랑스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2% 상승 발표¹⁵⁾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은 운송 서비스(10.2%) 및 숙박 서비스(11.7%)의 가격 상승에 따른 서비스 가격의 상승(1.3%)이 주요 원인
 - 반면, 공산품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2.4%)하였으며, 식품 및 담배 가격은 안정세를 보임

1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8-26/japan-s-finance-ministry-seeks-record-budget-for-debt-financing>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japan-ministry-request-record-sum-debt-servicing-costs-draft-shows-2025-08-26/?utm_source=chatgpt.com

13)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5/07/28/french-pm-bayrou-slams-eu-us-trade-deal-as-submission_6743814_7.html

14) <https://www.reuters.com/business/retail-consumer/french-pm-says-eu-us-trade-deal-an-act-submission-dark-day-europe-2025-07-28/>

15)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630008>

영국



-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역시 전년 대비 상승
 - 근원 인플레이션이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했고, 7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

8.14. 통계청, 2025년 2분기(4~6월) GDP 추정치 발표¹⁶⁾¹⁷⁾

- 2025년 2분기 영국 GDP, 전 분기 대비 0.3% 증가 및 전년 동분기 대비 1.2% 증가
 - 2025년 2분기 성장은 건설업(1.2%)과 서비스업(0.4%) 부문의 성장에 기인
-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이 공공지출의 확대 및 대미 관세 인상 대비한 재고 확보에 따른 일시적 효과 때문으로 분석
 - 실제 기업의 투자 활동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며, 가계소비의 성장 역시 미미한 수준

8.20.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 발표¹⁸⁾¹⁹⁾²⁰⁾

-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
- 이에 영국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
 - 2025년 8월 7일,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는 기준금리를 4.25%에서 4%로 인하하기로 결정*

*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9명 중 4명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금리 동결을 주장하여, 5대 4 박빙의 표결 끝에 0.25%p 금리 인하 결정

8.27. 정부의 차입비용, 27년 만에 최고치 근접²¹⁾

- 영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8bp(0.08%p) 상승하여 5.62%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던 수치인 지난 4월의 5.66%에 근접한 수준
 - 최근 차입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국 정부의 부채 조달 비용은 연간 1,000억 파운드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약 10% 수준

16)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gdpfirstquarterlyestimateuk/latest>

17) <https://www.reuters.com/world/uk/uk-economy-slows-less-than-expected-giving-some-help-reeves-2025-08-14/>

18)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july2025>

19)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sustainable-finance-reporting/uk-inflation-rises-highest-since-early-2024-38-2025-08-20/>

20) <https://www.reuters.com/markets/rates-bonds/bank-england-cuts-rates-4-after-narrow-5-4-vote-2025-08-07/>

21)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5/aug/26/more-pain-reeves-government-borrowing-jumps-26-year-high>

중국



-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한 재정 안정성 확보 압박 확대
 -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100억 파운드 규모의 여유 자원(buffer)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00억 ~500억 파운드 규모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입확충, 지출감소 및 차입확대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
 - 한편, 차입비용 상승 및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 번복 등을 고려할 때 세금인상 가능성 상승

8.8. 국채 및 금융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 재개²²⁾

- 재정부는 2025년 8월 8일부터 신규 발행 국채, 지방정부채권, 금융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8.4.)
 - 8월 8일 이전 발행 채권은 만기까지 면세 혜택 유지(신규 발행분부터 과세)
- 채권시장 초기에 설정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판단과 세수 증대 목적이 시행 배경
 - 2025년 1월 말 기준 중국 채권시장 누적 발행 규모는 약 183조 위안(3경 5,306조 원, 세계 2위)
 - 캐이통 증권에 따르면 6% 과세 기준, 2025년 약 320억 위안(44.6억 달러) 세수입 증가 예상

8.19. 재정부, 1~7월 재정 동향 발표²³⁾

- 1~7월 재정수입은 13.58조 위안(1.9조 달러)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
 - 중앙정부 수입은 5.85조 위안(전년 대비 2% 감소), 지방정부 수입은 7.73조 위안(1.8% 증가)
 - 세수입은 11.09조 위안(전년 대비 0.3% 감소), 세외수입은 2.49조 위안(전년 대비 2% 증가)
- 1~7월 재정지출은 16.1조 위안(전년 대비 3.4% 증가)
 - 중앙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8.8%, 지방정부 지출은 2.5% 증가
 - 분야별: 교육(2.44조 위안, 5.7%), 과학기술(5330억 위안, 3.2%), 사회보장 및 고용(2.76조 위안, 9.8%)

22)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ends-tax-exemption-bond-interest-income-effective-aug-8-2025-08-08/>

23) https://english.www.gov.cn/archive/statistics/202508/19/content_WS68a46584c6d0868f4e8f4efa.html



8.15. “부동산 호황과 생산성 성장(Housing Booms and Productivity Growth)” 워킹 페이퍼 발간²⁴⁾

- 2000년부터 2023년 동안 캐나다의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가격과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 가격이 거시경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 캐나다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생산성은 둔화 상태 지속
 - 캐나다 상장기업 자료를 토대로 기업 생산성과 부동산 보유 간의 관계, 부동산 가격 변화가 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과 부동산 보유량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주택 가격 상승은 유형 자산 등 기업의 자산보유 수준과 비례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
 - 산업 수준의 분석에서는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전반적인 생산성도 증가하지만, 유형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산업의 경우 반대의 경향
 - 연구진은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호황이 잠재적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 것으로 해석

8.22. “아시아의 중기 성장 전망 분석(Dissecting Medium-Term Growth Prospects for Asia)” 워킹 페이퍼 발간²⁵⁾

-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의 경제 성장 동인을 탐색하고 중기 경제 성장 전망을 제시
 - 성장 회계와 머신러닝 기법, 동적 시간 왜곡(Dynamic Time Warping, DTW)²⁶⁾을 통해 인구, 자본, 생산성, 인적 자본이 아-태 지역 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현재와 유사한 과거 시기와의 패턴화를 통해 향후 성장치를 도출
- 아-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과 구조개혁을 강조
 - 성장세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고령화), 총요소생산성(TFP) 둔화, 자본 심화(capital deepening) 감소 등이 지목
 - 성장 둔화 대응을 위해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투자 확대, 규제 정비 등을 제안

24) Yuanchen Yang, Flora Lutz, and Lucy Qian Liu. “Housing Booms and Productivity Growth”, IMF Working Papers(2025:161), IMF(<https://doi.org/10.5089/9798229018548.001>)

25) Natasha X Che 외, “Dissecting Medium-Term Growth Prospects for Asia”, 22.8.2025, IMF Working Papers(2025:168), IMF(<https://doi.org/10.52089/9798229018418.001>)

26) 동적 시간 왜곡(DTW) 분석은 두 배열 또는 시계열간 거리를 계산하거나 유사한 패턴을 비교할 수 있음. 즉, 이벤트로 인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발생한 두 시계열의 패턴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9.9. “2025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 2025)” 보고서 발간²⁷⁾

-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교육체계, 진학률, 학업성취도, 교육투자, 학생·교원 현황, 성인역량 조사(PIAAC) 결과 등 포괄적인 교육지표를 이용하여 국제비교 제시
 - 1992년부터 발간된 연례보고서로 올해는 고등교육에 초점을 두고 총 4개 파트(교육기관의 성과, 교육 접근성, 교육재정, 교원 등 학교 조직)에 걸쳐 분석
- OECD 회원국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 이후 고등교육 이수율의 증가 속도는 둔화
 - 교육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상존함에 따라 사회적 이동성 확보를 위한 교육 접근성 확보 강조
- 한국은 청년층(만 25세~34세) 고등교육 이수율(70.6%)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성인(만 25세~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는 소폭 확대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021년 대비 24.9% 증가하였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 대비 감소

9.11. “2025 조세정책 동향(Tax Policy Reforms 2025)” 보고서 발간²⁸⁾

-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113%까지 상승한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 인구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구조적 재정과제 대응을 위한 세수 확대 필요성 부각
 - 향후 세원 확충과 조세의 형평성 확보가 중장기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며,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과세정책 설계 강조
- 엔데믹 이후 조세감면 축소 및 선별 지원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2024년에는 국가채무 및 이자 지출 증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및 사회보장 기여율 인상 추진
 - 소득세는 이전 연도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각종 공제 감면은 확대
 - 법인세의 경우 2015년 이후 최초로 세율 인상국이 인하국을 상회하는 동시에 감가상각 특례 등 지원조치 병행
 - 소비세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함께 한시적 부가가치세율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표준 부가가치세율 인상
 - 담배, 주류, 설탕 음료에 대한 건강관련 소비세 인상과 탄소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가격제 강화 등 환경 관련 세금정책 활용도 증가

27) OECD(2025), Education at a Glance 2025: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c0d9c79-en>

28) OECD(2025), Tax Policy Reforms 2025: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e648d27-en>

09

2025
September

Fiscal Calendar



재정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실시(기획재정부, 9.3.)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9.3.)
- 금번 장기재정전망은 2015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최근 인구구조와 성장률 변화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여 실시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기관(한국개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예산처 등)의 전망기법을 활용하여 전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 장기재정전망은 향후 40년간 제도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국가재정상태를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금번 전망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성장률 제고,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사회보험 개혁의 필요성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



경제

2025년 경제전망(한국은행, 8.28.)

- 올해 성장률 전망, 0.8%(5월)→0.9%로 소폭 상향 조정
- 건설투자는 부진하나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 앞으로 내수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이 미 관세 영향으로 점차 둔화할 전망, 성장 전망 경로에는 마중 무역협상 및 반도체 품목 관세, 건설경기 향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0%(5월 전망 1.9%)로 전망
-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한국은행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전망

2025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통계청, 9.2.)

-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6%,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4% 각각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하락,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7.8% 상승

재정

- 2026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1월

재정

- 2024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4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3월

재정

- 2024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4월

재정

- 2026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4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경제

- 통계청 2025년 1/4분기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 (Economic Outlook) 발표

5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6월

재정

-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경제

- 202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통계청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7월

재정

-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5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8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9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0월

경제

- 통계청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11월

재정

- 2026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12월

귀족의 우아한 그림, 시민들의 진실한 그림

뛰어난 예술 작품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잘 보여준다. 로코코 양식이 당대 부르주아의 가치관을 대변해 자기자기하고 화려하며 우아하고 여성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피어난 계몽주의는 당대 예술이 광범위한 대중을 위한 예술로 변모하기 시작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계몽주의 회화는 특정한 양식보다는 동일한 내용을 공유하며 당시 지식인들의 세계를 흥미롭게 묘사한다.

글·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 세종사이버대 교수

01 키테라섬으로의 여행

장 앙투안 바토, 1717년, 캔버스에 유채, 129x194cm,
루브르박물관, 프랑스



18세기 초반부터 프랑스의 예술 사조는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오직 소수의 특권 계층만을 위해 존재했던 회화에서 부유한 시민, 즉 부르주아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그림들이 등장한 것이다. 170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 시민계급은 점점 더 힘을 얻으며 부상했고, 특권계층인 귀족들과의 갈등 역시 커지게 된다. 이 갈등은 마침내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으로 폭발했다. 프랑스 대혁명은 어떤 우연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필연에 가까웠다. 18세기에 유행한 두 가지 예술 사조, 로코코와 계몽주의 예술은 그런 화약의 불씨를 회화의 틀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은 시대정신의 모자이크’라는 예술사학자 헨드릭 반-룬의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조가비 장식(Rocaille)’에서 ‘로코코’라는 말이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로코코 양식은 루이 15세의 애첩 폰파두르 후작 부인의 살롱과 귀족 저택의 실내장식에서 생겨났다. 애당초 휘장, 식탁보, 가구 등의 장식을 가리키던 ‘로코코’는 점차 미술과 건축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로코코라는 말의 뉘앙스에서 풍기는 인상처럼 이 사조는 가볍고

우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을 주는 데 당시 사람들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 마치 타조 깃털로 치장한 여인처럼 지나치게 가볍고 장식 과잉이라는 사실 말이다. 흥미롭게도 귀족들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로코코를 좋아했다.



02 풍파두르 후작 부인의 초상

프랑수아 부세, 1756년, 캔버스에 유채, 212x164cm, 알테피나코테크, 뮌헨

로코코 스타일의 중심에는 루이 15세의 애첩 풍파두르 부인이 있었다. 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베르사유에 입궁해서 까다로운 궁정 예절을 단숨에 익혔으며 19년을 궁정에서 살며 국왕, 프랑스, 유럽을 지배했다. 특히 그녀는 로코코 스타일 화가들 중에서 화려한 색감의 소유자인 프랑수아 부세(1703~1770년)를 총애했다. 부세가 그린 수많은

풍파두르 부인의 초상들은 로코코 스타일의 완성품으로 여겨진다.

뮌헨 알테피나코테크에 소장된 풍파두르 후작 부인의 초상은 어여쁜 여성의 초상만은 아니다. 이 초상 속의 모든 디테일들은 대단히 주의 깊게 배치된 것이다. 장미꽃이 수놓아진 초록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부인은 책을 읽다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에 살짝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

긴 목을 돋보이게 하는 초크 장식, 프랑스 리옹에서 제작된 실크 드레스, 가슴 앞섶에 달린 분홍 리본 등은 부인의 여성적이고 우아한 취향을 자랑한다. 동시에 부인의 손에 들린 책, 뒤편 거울을 통해 보이는 제법 큰 규모의 책장, 오른쪽에 놓인 책상 등은 그녀의 지식과 학구열을 과시하는 부분이다. 그림에 그려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는 물론 루이 15세일 것이다.

이 초상은 로코코 스타일의 정수인 동시에 풍파두르 부인이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후원할 만한 지성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부인은 볼테르, 디드로 등이 주도한 백과전서의 출간을 꾸준히 후원했다. 이 한 장의 초상에서 우리는 풍파두르 부인의 만만치 않은 정치적 능력을 읽을 수 있다.

03 그네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 1767년, 캔버스에 유채, 81x64cm, 런던 윌리스 컬렉션, 영국





04 가정교사

장 시메옹 샤르댕, 1739년, 캔버스에 유채, 46.7x37.5cm, 캐나다국립미술관, 캐나다

시민의 일상을 담은 회화의 등장

로코코 사조는 왕궁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사조를 주도한 이들은 왕족이 아닌 귀족들이었다. 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부세와 동시대였던 화가 장 시메옹 샤르댕(1699~1779년)이 보여준 스타일은 왕족과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에게 그 시선이 맞춰져 있었다. 샤르댕은 루이 14세 이래 이탈리아 스타일을 계승해 온 프랑스 미술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로마 유학을 가지 않았던 화가였다. 그는 밝은 색채의 로코코 스타일을 거부하고 소박하고 가라앉은 색채로 평범한 이들의 일상을 묘사했다. 샤르댕의 그림 '가정교사'는 안락한 집을 떠나 밖으로 향할 준비를 하는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림 속의 두 인물, 소년과 중년 여성이 있는 공간은 현관이다. 아이는 외투를 입고 푸른 리본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긴장한 표정으로 책을 옆에 끼고 있다. 아이의 발치에는 배드민턴 라켓, 카드 같은 장난감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아이는 지금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중이다. 장난감을 가지고 뒹굴면서 놀던 시간은 지나갔다. 의자에 앉은 여성은 아이 물건치고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모자를 털어주면서 무어라 당부의 말을 건네고 있다. 흰색 모자와 앞치마, 그리고 튼튼해 보이는 붉은 의자는 그녀가 바깥이 아니라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조금 열린 현관문을 통해 밖의 풍경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바깥의 장면은 그림에서는 잘 알 수 없다. 밖은 아이에게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다.

그러나 아이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밖으로 내디뎌야 한다. 검은 공단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모자는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는 상징처럼 보인다. 그림의 제목이 '가정교사'인 이유, 그림에 아이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샤르댕은 서른 여섯에 아내를 잃었지만 마흔 여섯이 될 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웠다고 한다. 그림 속 아이와 중년 여성은 샤르댕의 아들과 가정교사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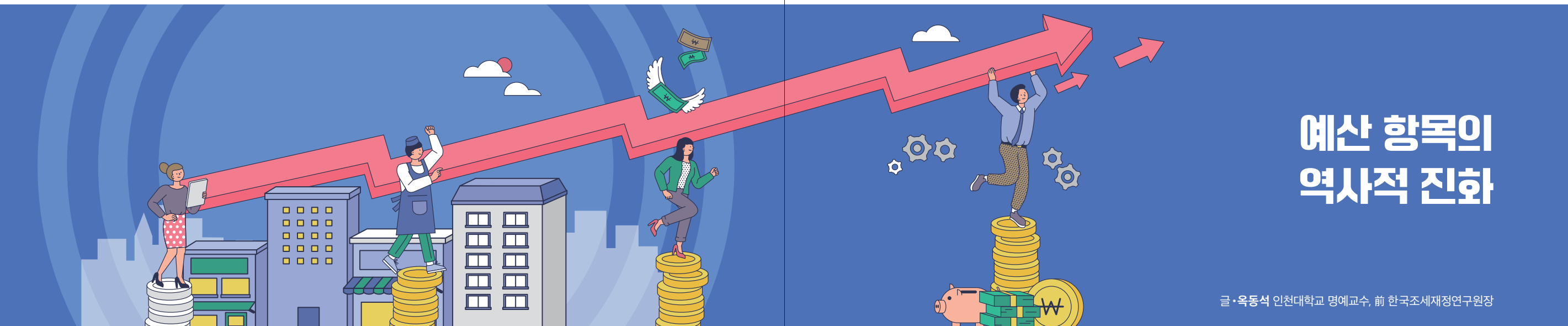
유럽 각국에서 시민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예술은 점점 더 시민을 위한 예술, 나아가 광범위한 대중을 위한 예술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화려하지만 공허한 로코코 회화는 이내 계몽주의 회화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예술의 판도가 암시하듯, 귀족과 시민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으며 이 갈등 양상에서 저울의 추는 점차 시민들의 쪽으로 기울어졌다. 종교 개혁과 영토 분쟁으로 점철된 1600년대를 지나서 1700년대의 유럽은 전반적으로 평화로웠으나,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평화일 뿐이었다.

05 깨진 달걀

1756년, 장 바티스트 그뢰즈, 캔버스에 유채, 73x94cm,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미국





예산 항목의 역사적 진화

글·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민주주의 체제의 정부예산은 국민, 정치인, 관료들로 구성된 이중적 주인-대리인 관계 속에서 일종의 신탁(trust)이다. 위탁자인 국민을 대리하여 수탁자인 정치인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국민의 일반 이익을(또는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용도를 결정하면서, 또 다른 수탁자인 정부 관료들이 그 용도에 따라 집행하였는지 실적을 점검하며 엄중하게 추궁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근대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심의 승인하며,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 의회가 사후검사를 하는 4단계의 예산주기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주기 속에서 정부예산은 방대한 개수의 예산 항목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출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신탁을 위한 일종의 계약이다. 계약이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사항과 함께 그 요구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제재도 당연히 이 계약에 포함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항목을 계약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과 형식이 너무도 빈약하고 영성하다. 막대한 금액의 지출을 승인하면서도 그 요구사항은 예산 항목의 명칭(장-관-항으로 분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전개된 예산 항목 진화의 역사는 이러한 계약을 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¹⁾

Ⅰ 비목 중심의 예산 항목

미국 최초의 예산인 1779년의 『지출 승인법(Appropriation Act)』은 연방정부 전체를 4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예산에 대한 요구사항도 150여 개 단어로 구성될 만큼 그 분량도 매우 짧았다. 예산 항목의 구분과 내용이 이렇게 간단했다는 것은

곧 행정부의 예산 집행 재량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 내에서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 재량과 의회의 재정통제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었는데, 이후 140여 년간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법률을 제정하였다.

미국 연방정부는 1809년에 예산 항목을 비목들로 구분하고 이들에 따라 재정 및 회계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을 채택하였다. 비목이란 정부 기관이 지출로 획득하는 목적물(objects) 또는 투입물(inputs) 유형들을 구분하는 것인데, 재정관리 는 정부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목들을 자세하게 추정하고 이들에 따라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각종 거래를 기록하는 회계업무에서는 구입한 비목을 자세하게 명시한 전표들이 보관되어야 하는데, 예산 및 재정 제도는 이러한 전표들의 승인과 관련 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이 당시 예산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금의 횡령,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의 사용, 방만한 낭비 등을 방지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일련의 법적 절차와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의회는 원칙적으로 행정부를 불신하며 행정적 재량의 여지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자 하였다. 행정부의 예산 권한을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예산 항목을 비목들로 구분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의회는 행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 비목을 더욱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Ⅱ 예산 항목과 계정과목의 구분

예산 항목을 비목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최초의 반론은 행정부 주도의 예산편성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1912년 '경제성·효율성 위원회(Commission on Economy and Efficiency)'에서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의회가 정책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으로 행정부의 재량을 박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행정 관료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비목

1) 이 글은 GAO, 1994, *Budget Object Classification: Origins and Recent Trends*, GAO/AIMD-94-147, 그리고 Mikesell, John L., 2011, "Budget Classification, Systems, and Reform: Trying to Make Better Choices," Chapter 5, *Fiscal Administration: Analysis and Application for the Public Sector*를 주로 참조하였다.

금액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추정은 하지만, 이들을 통제 목적의 예산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위원회는 제안하였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는 두 가지 법률을 제정하며 비목통제 방식의 예산 항목 분류체계를 점차 포기하기 시작하였다.²⁾ 첫째, 1921년의 『예산 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에서 행정부 내에 예산실을 신설하여 예산실이 여러 비목으로 구성된 지출명세서를 검토·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개별 비목을 통제하는 업무에서 벗어나 예산 항목의 금액을 조직, 사업별로도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1923년의 『직제법(職制法, Classification Act)』을 통해 연방정부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직위분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법률은 직위(positions)를 그 업무와 책임에 따라 분류하여 계급을 부여하고, 각각의 직위와 계급에 대해 모든 정부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보수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예산 항목에서 개별 직위와 보수를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법률로 1930년대부터는 예산 항목에서 비목을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의회는 중앙집중식 절차와 표준을 통해 비목들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감사원(GAO, 1921년 예산회계법에서 설립된)을 통해 행정부의 지출을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의회는 예산 항목을 조직, 기능, 프로젝트, 활동들로도 규정할 수 있게 되었고, 비목들에 대한 자료는 예산안의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었

다. 결국 의회의 재정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 항목은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세한 비목들을 기록하는 회계상 계정과목과 그 기능이 구분되었다.

Ⅰ 활동 중심의 ‘전통적’ 성과예산

기능, 활동 및 프로젝트에 기초한 예산의 필요성이 이후 더욱더 강조되면서 의회는 1950년 『예산 및 회계절차법(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을 제정하였다. 이는 1949년 후버위원회(Hoover Commission)의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의회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성과주의 예산은 의회가 지출승인 요구를 건전하게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건전한 판단이란, 의회가 인건비, 소모품, 장비 등이 얼마나 요구되는가를 자세히 점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작업과 서비스가 수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 작업과 서비스에 얼마의 원가가 소요되는지를 의회가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³⁾

이러한 ‘성과예산’은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activity), 작업(work), 과업(task)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성과예산과 다르다.⁴⁾ 성과예산은 비목이 아니라 예산의 목표와 그 달성 정도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당시 의회는 활동들(도로 보수, 식목, 진료, 수업, 체포 등)을 중심으로 작업량(workload)과 같은 성과 정보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활동 등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작업량(도로보수 km)에 대해 단위원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과예산에 접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성과예산은 각 활동의 원가와 성과에 대해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또 여러 기관 사이의 유사한 활동을 비교하면서 정부기관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성과예산은 그 활동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적절한지 또는 이들이 생산원가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어떤 활동이 낮은 원가로 수행되는지를 검토하지만, 그 활동이 정부의 궁극적 가치인 ‘목표 생산물(end product)’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더구나 ‘전통적’ 성과예산은 수많은 활동과 그 단위원가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과도하다는 심각한 결점이 있었다.

Ⅰ 소관 조직에서 프로그램으로

1961년 미국 국방성은 기획-프로그램-예산을 연계하는 PPBS(Planning- Programming-Budgeting System)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ing)’으로 곧잘 불린다. 프로그램 예산은 비목과 활동 대신에 주요 공공 목표와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목표와 기능을 주요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목표에 기여하는 사업, 프로젝트, 활동을 묶어 프로그램이라는 독립적 재정관리 단위를 부여한다.

프로그램 예산은 국민이 가치를 인정하는 목표를 중시하기에 재정관리의 핵심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은 정부가 제공하는 생산물 또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식별하도록 요구하며, 이들

생산물 또는 서비스에 따라 예산요구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구분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의 목표에 대한 기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별 예산이 편성된다. 만약 완벽한 형태의 프로그램 예산이 도입된다면 유사한 목표들에 기여하는 서비스 대안들 사이에서 예산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통적’인 성과예산과 비목별 예산은 우선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프로그램 예산은 예산분류의 최상위 개념을 정부의 기능과 목표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별 기관은 자원 획득을 위해 같은 기능과 목표 내에서 여타 기관들과 경쟁해야 한다. 개별 기관의 예산이 먼저 결정되면 예산 경쟁은 소관 기관 내의 활동과 비목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프로그램 예산에서는 정부 부문 전체에 걸쳐 유사하고 동일한 목표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경쟁하게 된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예산에서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대안들 사이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지만, 비목 및 활동별 예산에서는 서로 다른 정책 목표 사이에서 자원 경쟁이 이루어진다.

Ⅰ ‘새로운’ 성과예산

프로그램 예산과 ‘전통적’ 성과예산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마침내 미국은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채택하였다. 이는 결과 중심의 ‘새로운’ 성과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궁극적인 정책 목표와 연관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예산의 특징을 지닌다. 반면 개별 기관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예산과 구분되는데, ‘새로운’ 성과예산은 개별 기관이 추구하는 조직상의

2) GAO, 1994, p.7 참조

3) GAO, 1994, p.9 참조

4) GMikesell, 2011, p.236 참조

미션(mission)과 임무를 중시한다. 개별 기관은 미션과 임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구분한 후 이들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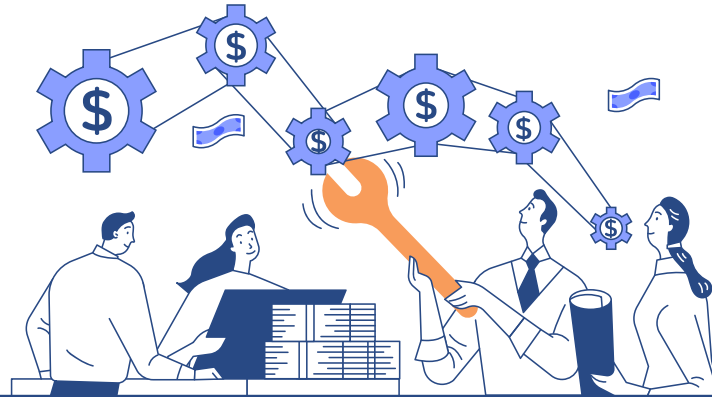
‘새로운’ 성과예산은 정부기관의 업무와 연결되는 성과와 목표의 측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의 성과로서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의 활동 또는 산출물(output)이 아니라 사회적 결과(outcome, result) 또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후자에 집중하여 기관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새로운’ 성과예산 아래에서 기관들은 프로그램으로 생산되는 산출물과 결과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계량적인 성과목표를 부여하며, 이들 성과목표에 기초하여 예산을 요구한다. 투입 또는 업무에 대한 세세한 사항보다 결과에 집중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의 이익에 더욱더 순응하게 되고, 또 행정부는 더 많은 재량을 확보할 수 있기에 서비스 제공에서 더 효율적이며 기업가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⁵⁾

‘새로운’ 성과예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전개된다. 첫째, 기관의 미션을 중심으로 목표 및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정부기관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전략계획에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달성하려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 전략계획과 결과 사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프로그램별로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서 측정

은 기관의 활동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후 기관들은 경영상의 재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예산 집행 이후의 감사와 평가에서는 예산의 세부적 지출방법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와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기서는 주어진 자원을 왜 그렇게 집행했는지 해명하고 설명하는 ‘해명책임’ 또는 ‘설명책임’이 강조된다.

Ⅰ 예산 항목과 해명책임(accountability)

지금까지 살펴본 예산 항목의 역사적 변천은 미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발견되고 있다.⁶⁾ 많은 국가에서 예산 항목이 비목, 활동, 프로그램, 산출물, 사회적 결과의 순서에 따라 변천했다는 것은 결국 예산 항목이 목적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목적이란 궁극적으로 정부기관의 존재 이유 또는 정부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를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모든 예산 항목이 사회적 결과를 중시하는 ‘새로운’ 성과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예산 항목의 최종적인 진화 단계인 결과 중심의 성과예산을 채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⁷⁾ 만약 정부 부문 전반에 걸쳐



회계상의 부정과 오류가 만연하거나, ‘활동별 원가 계산(ABC, Activity- Based Costing)’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정부 부문의 칸막이식 운영으로 그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역량이 매우 낮다면, 결과지향적 성과예산을 채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유사한 상황을 민간 부문의 자율적 시장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시장의 계약은 그 대가의 지급 형태에 따라 고정가격(fixed price)과 원가보전(cost reimbursable) 두 가지를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발주자가 최종적인 산출물만을 확인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투입, 활동, 절차 등에 대해서는 완전한 재량을 계약자에게 부여한다. 반면 후자는 최종 산출물의 점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투입 과정을 살펴보고 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다.

여기서는 계약자가 투입, 활동, 작업 등을 발주자와 계속 협의하며 보고하는 형태를 취한다. 현실의 시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들은 ‘고정가격’과 ‘원가보전’을 양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 사이에 위치할 것인데, 시장 기능이 발전할수록 ‘고정가격’ 계약의 영역은 더 넓어질 것이다. 시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계약 형태에 대한 개념적

원리는 정부의 예산 항목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시장에서의 조달계약이 아니라 정부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원가보전 계약 이상으로 불완전한 계약의 상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⁸⁾ 계량적 성과지표가 부여되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면 그 하위 요소들에 대해 많은 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하위 요소들 또는 투입물을 관리 통제해야 하기에 재량 부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예산 항목 진화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결론적으로 예산 항목은 위임하는 재량과 추궁하는 책임 사이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택이다. ‘해명책임’이 특정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책임(responsibility)과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회가 행정부의 ‘해명책임’을 얼마나 잘 추궁하느냐에 따라 행정부에 더 많은 재량을 위임함으로써 그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결과를 담보하는 역량이 개선되면 위임하는 재량의 범위도 커진다. 정부 전반의 예산 및 재정관리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회는 그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해명책임을 추궁하는 결산 기능의 역량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5) David Osborne and Ted Gaebler, 1992,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Mass.: Addison-Wesley 참조.

6) Schick, Allen, 1998, *A Contemporary Approach to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World Bank(한국어 번역: 옥동석, 2020, 『현대적 공공지출 관리: 예산편성 및 분석 방법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조. 특히 행정부에 대한 절대적 불신 속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프랑스에서는 예산 항목 변천을 ‘전문성의 원칙(le principe de spécialité)’으로 설명하고 있다.

7) Schick, Allen, 1998, “Why Mos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Not Try New Zealand Reform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13, No.1, pp.123~131 참조.

8) 불완전 계약이란 ‘사전적 약정’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계약인데, 관련 내용은 옥동석, 2025, “시장실패의 교정수단들: 조직과 계약의 거버넌스,” 『나라재정』 2월호, pp.42~47 참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물류, 이커머스 경쟁력의 핵심

신민성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이커머스의 성장

지난 10여 년간 유통산업을 관통하는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이커머스의 폭발적 성장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모바일 결제 환경의 고도로 온라인 쇼핑은 이미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흐름을 가속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제한은 오프라인 매장의 수요를 온라인으로 강제 이동시켰고, 이에 따라 택배와 배달 서비스는 전 국민적 보편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였다. 산업부에서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2023년 처음으로 국내 주요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50.5%로 오프라인 매출(49.5%)을 앞질렀다. 특히,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는 2017년 2.7조 원에서 2023년 26.4조 원으로 10배(연평균 성장률 45.9%)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물리적인 쇼핑보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우선시하며, 이러한 환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글로벌 사례로 월마트와 아마존의 경쟁을 들 수 있다. 월마트는 오프라인 유통의 절대 강자였지만, 배송 네트워크와 온라인 서비스 역량에서 아마존을 따라잡지 못했다. 결국 온라인 전환 흐름에서 뒤처지며 세계 최대 e커머스 업체 아마존이 ‘유통 공룡’ 월마트를 제치고 2025년 초 역대 처음으로 미국 내 유통분야 분기 매출 1위에 올랐다. 이는 물류 역량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치열한 배송서비스 경쟁

이렇듯 치열한 온라인 쇼핑 생태계에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물류 서비스다. 과거 소매업의 승부처가 가격과 상품력에 있었다면, 이제는 배송의 속도와 정확성이 승부를 가른다. 소비자들은 더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멤버십을 통한 락인

(Lock-in) 효과까지 더해지며, 유통기업의 배송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증가하는 배송물량을 정확하고 빠르게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하기 위해서 물류는 스마트해져야 했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역할을 넘어, 고객의 원하는 주문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창고에서 빠르게 주문된 물건을 꺼내와 포장하여 가장 최적 경로를 통해 고객에게 배송해야 한다. 나아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 정보로 고객에게 제공해 상품의 처리 현황과 예상 수령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요구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물류는 단순한 지원 기능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물류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다.

물류 전 과정의 스마트화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과 치열해진 배송 경쟁은 물류기업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거나 기존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급증하는 주문량과 고객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제 물류는 전 과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되고, 자동화·디지털 기술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실제로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AI 기반 수요예측, 로봇을 활용한 창고 자동화, 무인 배송 로봇과 드론을 통한 라스트마일¹⁾ 혁신뿐 아니라, 통합 플랫폼 기반 실시간 가시성 확보, 로봇과 인력의 협업(Co-bot), 개인 맞춤형 물류 서비스, 친환경 운송체계까지 전 영역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마트 물류는 일부 단계의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 과정의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수요예측은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다. 온라인 쇼핑은 주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통해 재고와 물류 자원을 최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쿠팡의 ‘로켓배송’이나 마켓컬리의 ‘새벽배송’은 AI 수요예측과 물류센터의 적시 보관 시스템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하루 만에 상품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예측 기술은 단순히 판매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고 과잉을 줄이며 물류센터와 배송 차량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신선식품은 수요예측에 실패할 경우 전량 폐기로 이어져 손실이 큰 품목이지만, AI를 활용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 오프라인 매장의 신선식품 폐기율보다 낮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류센터는 스마트 물류의 심장부이자 혁신의 핵심 거점이다.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 하역·분류·피킹·이송·상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던 이 업무들이 이제는 자동화 설비와 지능형 로봇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자율이동로봇을 도입해 창고 내 상품 이동을 자동화하며 작업 속도를 크게 높였고, 현재는 글로벌 주요 물류기업 전반에 다양한 로봇 기술과 자동화 장비가 물류센터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DHL, FedEx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물류기업과 국내 대형 택배사들까지 로봇팔(Robotic Arm)과 자율이동로봇(AMR; Autonomous Mobile Robot)을 적극 도입하며, 기존의 컨베이어·작업자 중심 구조를 유연하고 고도화된 프로세스로

1) 배송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는 단순한 속도 향상을 넘어, 운영비 절감·안전성 제고·에너지 효율화라는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한다. 국내외에서도 변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다수의 물류기업은 AI 기반 피킹 로봇을 활용해 상품을 자동으로 집어 올리고, 무인 운송로봇을 도입해 창고 내부 이동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단위로 자동 분류 설비와 로봇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며, 하루 수백만 건에 달하는 주문을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류센터 고도화를 넘어 초지능화 기술의 도입도 시도되고 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운영하며 물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로봇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인간 수준의 유연성과 지능을 결합한 차세대 물류센터 모델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물류센터 자동화는 단순히 ‘효율화’ 수준을 넘어, 예측·저장·이송·출고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능형 공급망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을 넘어, 고객이 체감하는 배송 신속성과 정확성을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라스트마일 배송은 전체 물류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부담이 크고, 교통·기상·배송지 유형·반품 등 변수가 많아 여전히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과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혁신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경로 최적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배송 시간을 줄이고 작업 효율은 높이고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일정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온디맨드 서비스도 확산하고 있다. 또한 물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소싱 형태의 배송이 활용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로봇과 드론과 같은 무인 배송 수단도 점차 도입되어 도심은 물론 도서·산간 지역과 긴급 상황에서도 높은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통합 플랫폼 기반의 가시성(visibility)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과 IoT 기반 추적 시스템은 공급망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물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로봇 협업(Co-bot)은 자동화 확산 속에서도 인력과 로봇이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체력 소모가 큰 작업은 로봇이 맡고, 품질 검수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사람이 담당하면서 생산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데이터 기반 맞춤형 물류 역시 부상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생활 리듬을 반영해 특정 시간대 배송, 무인 보관함 연계 등 개인화된 서비스가 확대되며, 이는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물류(Green Logistics)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내연기관 운송수단에서 전기화물차, 수소트럭, 자율주행 전기밴이 도입되고 있다. 폭증한 이커머스 물량으로 과도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친환경 포장재, 순환형 물류 용기의 활용과 같은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스마트 물류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이 된다.

결국 스마트 물류는 수요예측에서 시작해 창고 자동화, 라스트마일 혁신, 최적화, 가시성 확보, 지속가능성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서비스 차별화와 고객 만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래의 스마트 물류

물류산업은 빠른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며 다변화하는 고객 수요를 충족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은 지속될 뿐 아니라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율성·초지능화·무인화의 확대가 가장 큰 변화의 축으로 꼽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확산되며,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AI 산업 혁신 전략이 발표되는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AI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물류산업 역시 더욱 정밀한 수요예측과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최적화 수준이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물류센터는 첨단 장비와 로봇 기반으로 운영되며, 인력을 필요로 하던 업무 대부분이 자동화될 것이다. 자율주행 트럭, 무인 배송 로봇, 드론 역시 기술적 안정성과 제도적 기반, 경제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본격 상용화되어 물류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라스트마일 부문은 특성상 모든 구간을 로봇이나 드론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부터 드론 등 무인 배송이 확산될 수 있겠지만,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은 국내에서

는 로봇이 기존 배송 인력의 생산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 차이와 공동주택 내 세대별 배송의 효율성은 여전히 인력이 강점을 가진 영역이다. 이에 따라 도심형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단순 대체가 아닌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초고층 건물 지하 물류 거점 및 전용 통로를 통해 화물을 직접 건물 내부로 연결하거나, 빌딩 내 화물 전용 인프라와 이송 로봇을 결합한 차세대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네이버 신사옥 ‘1784’에는 세계 최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보포트’가 도입되어, 수십 대의 로봇이 독립적으로 층간 이동을 하며 빌딩 내 물류를 처리하는 사례를 구현하고 있다.

앞으로의 미래 물류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기능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민 삶 질 향상과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물류산업의 스마트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 예산 1,050억 원을 투입해 공동물류택배터미널 운영 기술,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 물류기술, 배송 로봇 등 12가지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새정부경제성장전략(2025.8)에서는 물류 휴머노이드부터 선도적 실증·보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선도기술 개발 중점분야로 물류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와 관심을 통해 물류산업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더욱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와 오스만 도시계획으로 도시를 발명하다

글·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교수

오늘날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불과 150년 전만 해도 파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때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1800년대 중반까지 파리는 오물과 악취로 가득 찬 더럽고 비위생적인 도시였다. 길은 비좁고 구불구불하여 통행이 불편하였고, 체증이 매우 심한 도시였다. 건물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들어차 있었고, 공원과 녹지도 없었다. 그리고 아직 상하수도도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소변, 오물, 폐수, 쓰레기 등을 길에 던졌고 그 때문에 길은 어디에서나 오폐물이 넘쳐 질퍽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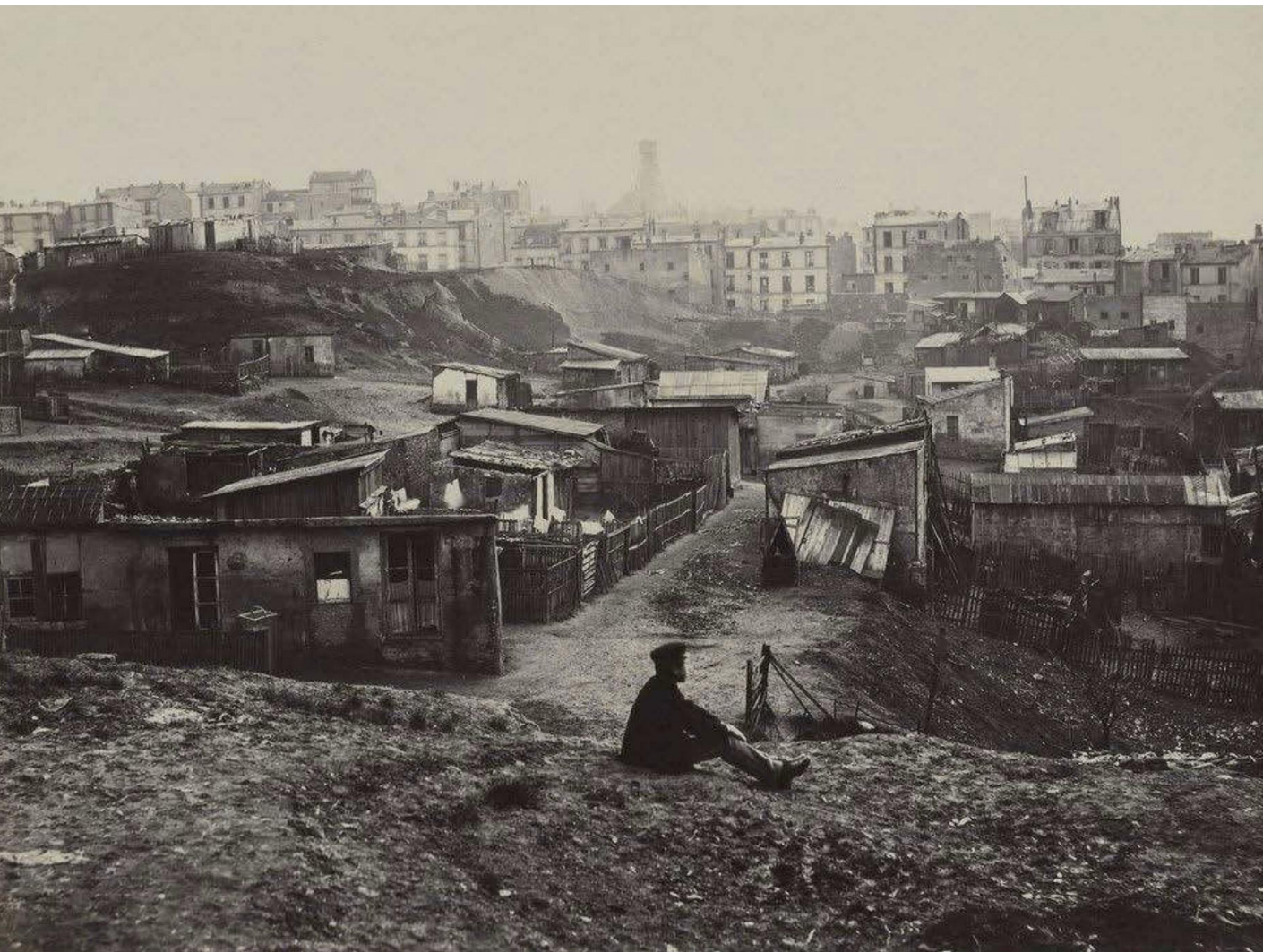


1800년대 중반 파리의 길

출처: wikipedia

더럽고 악취로 가득한 오물 속의 도시 파리는 1832년,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로 약 2만 명이 사망하였다. 지금은 콜레라라는 전염병 때문이라고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세균에 의한 전염병인지도 모른 채 반복되는 전염병의 발발로 수만 명이 죽어갔다.

하지만, 열악한 여건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자유를 찾아 파리로 몰려들었다. 1832년 약 60만 명이었던 인구가 1836년에는 약 100만 명이 되면서, 더럽고 어두컴컴한 미로 같은 중세 모습의 파리는 더욱 더 슬럼과 난개발에 몸살을 앓았고 도시환경은 더욱 악화하였으며 시민들은 더러운 환경 속에서 전염병에 시달렸다.



1800년대 중반 파리의 슬럼

출처: <https://thewestendmuseum.org/>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파리의 대대적인 도시 개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폴레옹 3세였다. 그는 유년 시절을 주로 망명지에서 보냈는데, 1852년 황제로 즉위하기 바로 전 있었던 망명지인 런던의 모습에 큰 영향을 받아 파리의 대개조를 생각하였다.

나폴레옹 3세는 즉위 이듬해인 1853년 오스만(Haussmann)을 파리 지사로 임명하고, 더럽고 비효율적인 중세적 도시였던 파리를, 시대를 앞서가

는 획기적인 새로운 도시 파리로 개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오스만은 부분이 아닌 도시 전체를 하나로 보면서 도시계획을 통해 파리를 개조해 나갔다. 그리고 이는 다시 벨그랑(Belgrand)과 알팡(Alphand)이라는 두 명의 공학자에게 맡겨졌다. 이들은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도시 이로움의 핵심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이를 위해 파리 대개조는 도시공간구조 개조부터 먼저 시작하였다. 이는 탁월한 판단이었다.

도시공간구조¹⁾ 개조에서 핵심은 간단히 물리적으로 말해 길(街路)을 정비하는 것이다. 편리한 교통은 상공업의 번영과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이다. 또한 충분하면서 좋은 가로망은 공기 흐름을 좋게 하여 악취도 없애고 도시에 밝은 햇빛도 가져다준다. 이를 위해 길을 추가하고 확장하고 정비하여 이동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었다.²⁾ 이 과정에서 파리에 200km의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

도시개조는 도시계획에 따라 가로 정비를 근간으로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가로의 정비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각적 전망의 확보, 공기 흐름의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

오염의 개선, 주택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용 토지의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향하고 있었다.

신규 가로는 기존 가로 또는 공공시설과 연결되게 하였고, 가로변에 공원과 접하도록 계획하여 시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높였다. 길에는 가로수를 심고 가로등도 설치하였다.³⁾

오스만은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시의 공공가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충분한 햇빛이 길에 도달하도록,⁴⁾ 건물은 도로 폭에 비례하여 높이 제한을 적용하였다.



파리 대개조로 신설되고 정비된 길

출처: wikipedia

- 1) 도시공간구조 계획에는 중심지 체계를 살피고, 밀도와 밀도패턴, 다양한 활동들의 입지 패턴, 이러한 활동들의 연결 등을 포함된다. 즉, 도시의 물리적 짜임새를 제대로 갖추는 일이다.
- 2) 파리 중앙 시테섬에 있는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 앞에도 길도 없었는데 이때 새로 만들었다.
- 3) 이때만 해도 길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창조적 발상이었다. 중세 시대라면, 누가 자기 땅도 아닌 길에 나무를 심고 가꾸겠는가? 과거 사진을 보면, 길에 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햇빛은 위생과도 관련 있는 사안으로 보았다.



파리 대개조로 새롭게 만들어진 길

출처: wikimedia

같은 맥락에서 층수도 6층으로 제한하였다. 파리 전역이 시각적으로 통일되고 조화로운 거리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변 모든 건물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해야 했으며, 일관된 파사드(건축에서 건물의 전면부나 외벽 디자인)를 유지해야 하도록 했다. 크림색 석조 외관, 높은 창문, 연철 발코니, 그리고 화려한 코니스가 특징이다. 지붕은 햇빛이 길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45도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 기간 동안, 34,000동의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고, 214,000호의 주택이 만들어졌다. 시민들의 여가와 쉼을 위한 공원도 조성되었다.

파리 서쪽에 볼로뉴, 동쪽에 뱅센, 북쪽에 쇼몽, 남쪽에 몽수리가 신규로 만들어졌다. 이 외에도 기존의 공원들도 손보았다. 17년 사이에 6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47km²에 이르는 공원과 녹지공간이 파리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공원과 녹지가 만들어진 적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또한 오스만은 박물관, 시립병원, 청사, 시장과 백화점, 요양소, 학교, 호텔, 극장 등 수많은 공공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여, 파리 시민들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을 통한 건축 규제

출처: <https://www.shutterstock.com/>

파리의 중앙을 흐르고 있는 센강은 원래 물이 많지 않은 건천(乾川)이었는데, 얕은 데 덮친 격으로 1865년 파리에 심각한 물 부족 사태와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상하수도를 크게 확장하는 사업을 하여 파리의 도시공공위생 상태를 개선하였다.

센강은 이미 수질이 악화된 상태라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센강을 대신하여 가까이 있던 뱅느(Vanne)강에서 식수원을 파리로 끌어오는 수로가 1865년 개통되었다. 뱅느

수로 건설에 32개의 터널과 20개의 다리가 신설되었다. 뱅느 수로는 확장되어 200km에 이르렀다. 이를 시작으로 상수도의 연장은 2배가 되었다. 아래 그림은 고대 로마의 수도교처럼 보이지만, 1800년대 중반에 파리 근교에 만들어진 수도교다. 사람들이 매일 같이 쏟아내는 대소변과 오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하수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도입하였다. 하수도는 1854년 163km에서 1870년 536km로 연장됐다. 상하수도를 포함한 여러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도시 지하에 길을 따라 커다란 공동구를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파리 도시의



뱅느강에서 센으로 물을 나르는 수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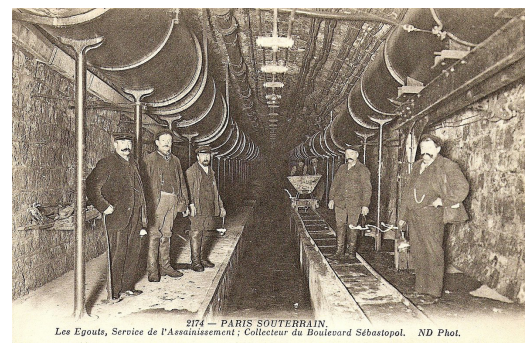
출처: wikimedia

위생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시민들의 건강이 개선되었다.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는 나폴레옹 3세 재위 기간인 1870년까지 17년 동안 진행되고 끝났다. 그렇게 오늘날의 도시 파리를 발명한 오스만을 기리기 위해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 근처에 오스만대로 (Boulevard Haussmann)도 있다.

오스만의 놀라운 도시계획은 실용적이면서도 상징적이었다. 오스만은 고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은 거대 건축물을 짓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파르테논이나 콜로세움 같은 건축물은 비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위대하다. 그는 파리 대개조를 통해 파리의 구태를 탈피하고, 멋지고 인간적이며 근대적인 오늘날의 파리라는 도시를 발명한 것이다.



파리의 공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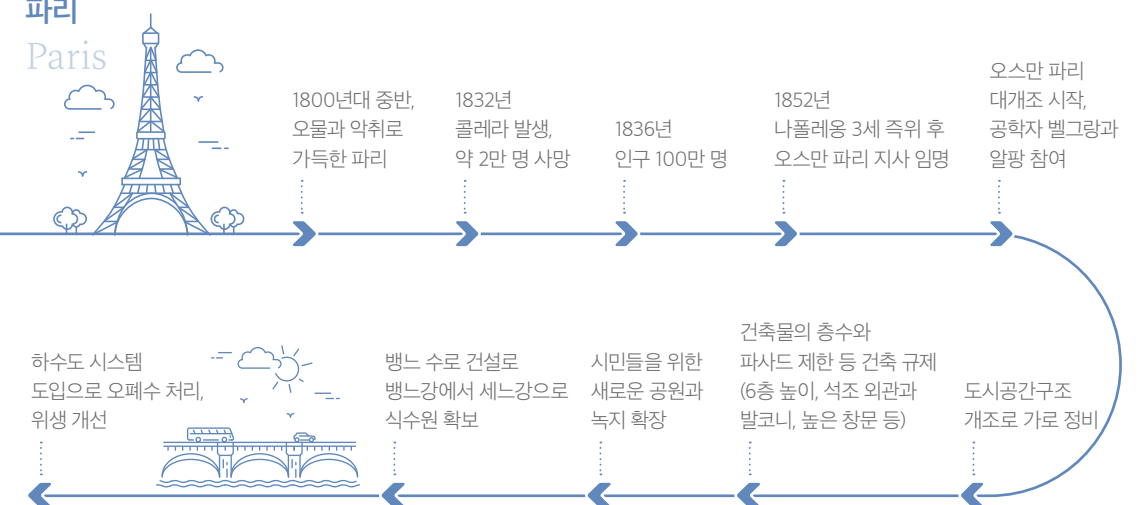
출처: wikimedia



피사로(Camille Pissarro)의 “몽마르뜨대로(Boulevard Montmartre)의 봄” 1897

출처: <https://www.langmatt.ch/>

파리 Paris





서울 남산공원에 위치한 성재 이시영 동상
(1986년 4월 17일 독립운동과 후학 양성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내 재산을 찾아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요

성재 이시영

서울 남산공원 여섯 위인 연재
세번째 이야기

글·조수빈 재정정보분석센터 청년인턴

* 서울 남산공원의 여섯위인 섹션은
청년인턴과 함께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진 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 정신은 말로 하기엔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엔 어렵다. 하지만 이 정신을 일생의 행동으로 증명한 인물이 바로 성재 이시영 선생이었다. 조선의 명문가 출신이었던 선생은,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막대한 재산과 지위를 내려놓고 서간도로 독립운동을 위해 떠났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조국의 독립을 위한 결단이었고,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한 선택이었다.

이시영 선생은 조선 말기, 16세부터 관리 생활을 시작하여 고위 관료로 형조좌랑, 홍문관 교리, 평안남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에 항의하며 교섭 국장직에서 물러난다. 권세보다 민족을 중시한 그는 이회영, 안창호 등과 함께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해 국권회복운동을 펼쳤다. 이후 1910년 국권이 완전히 피탈되자 여섯 형제와 함께 전 재산을 처분해 서간도로 망명했고, 그 재원으로 신흥강습소와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출된 독립군들은 훗날 청산리대첩과 봉오동 전투의 주역들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헌신은 교육과 군사훈련에만 그치지 않았다. 「감시만어(感時漫語)」를 저술해 한국사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강조했다. 또한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줄곧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다.

광복 이후에도 그는 민족의 통합과 교육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 신흥무관학교 건학 이념을 계승하고자 1947년 성재학원을 세워 훗날 경희대학교로 이어지는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어 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이후 1951년, 국정 혼란과 사회에 만연한 부패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표와 함께 부통령직을 사임한다. 이는 자신의 원칙을 지킨 결단이었고, 국가의 도덕성과 민족정신을 지키려는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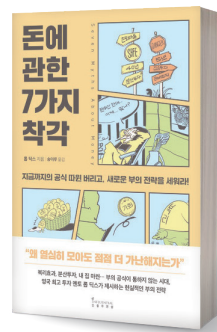
성재 이시영 선생이 걸어간 길은 한 시대의 독립운동가를 넘어, 공동체를 위해 가진 것을 내어놓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선생이 몸소 실천한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공동의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실천해야 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일 것이다.



이시영 선생이 정부통령 취임식 연설을 하는 모습(1948.07.28.)

출처: 독립운동인명사전

경험과 지혜로 대비하는 변화무쌍한 미래



「돈에 관한 7가지 착각」

롭 디क्स 지음 | 인플루엔셜

이 책은?

지난 시대의 공식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부의 전략

기존의 경제 관련 도서나 금융서들이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저성장을 겪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기존의 부의 법칙은 통하지 시대다. 때문에 저자는 달라진 금융 환경에 맞는 새로운 부의 전략을 제시한다. 저축, 조기은퇴, 복리효과, 내 집 마련, 분산투자 등 뿌리 깊이 자리잡은 잘못된 믿음을 뒤집고,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투자 전략을 스스로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보호-유지-개선의 3단계 관점에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점검하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방어하는 등 무모하지 않은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돈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세우는 8단계 실행 전략

- 1단계: 지출 의식하기-무심코 쓰는 돈을 멈추고 진짜 행복을 주는 소비만 남겨라.
- 2단계: 먼저 저축하기-‘남은 돈 저축’이 아니라 ‘저축 후 소비’가 원칙이다.
- 3단계: 보호 버킷 만들기-예상치 못한 위기를 막아줄 ‘긴급 안전망’부터 갖춰라.
- 4단계: 유지 버킷 구축하기-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며 자산 가치를 지켜라.
- 5단계: 개선 버킷 확장하기-집중투자-레버리지-인전자본 등 성장을 이끄는 공격 자산에 투자하라.
- 6단계: 시스템화하기-저축과 투자를 자동화하라.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부를 만든다.
- 7단계: 소득을 늘리기-절약만으로는 한계다. ‘추가 수입원’이 진짜 판을 바꾼다.
- 8단계: 돈의 주인이 되기-두려움, 불안, 죄책감에서 벗어나 돈을 ‘삶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라.

그 어떤 시대보다 예측불가능하고 세계적인 저성장이 계속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오랜 경험 끝에 배어 나오는 통찰과 지혜,
그리고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전략이다.



「워런 버핏과 찰리 멩거, 세계 최고의 투자 수업」

워런 버핏, 찰리 멩거 지음 | 교보문고

이 책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 두 명이 전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 수업

워런 버핏과 찰리 멩거는 1년에 한 번,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즉문즉답 형식으로 투자, 경영, 인생, 실수, 배움, 철학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60년간 이어왔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자본주의 콘서트’라고 불리는 이 즉문즉답을 통해 그들이 남긴 말들은 단순한 투자 지침을 넘어 ‘돈이 되는 가르침’으로 남았다. 투자의 전설들이 긴 시간 실전 투자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하며 얻은 지혜와 통찰력을 한 권에 담은 이 책에는, 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투자와 경영의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워런 버핏과 찰리 멩거의 투자에 관한 지혜 몇 가지

- 투자와 수학의 관계-수학이 투자에 도움을 준다는 건 착각이다.
- 기업의 사회 공헌-돈을 벌고 모으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찾아라.
- 인터넷과 경쟁-경쟁은 치열해지고 자본이익률은 낮아진다.
- 금융기관과 은행-금융기관은 재무제표로 파악이 어렵다.
- 추천 도서-새 지식을 얻는 것보다 기존 지식을 버리는 게 어렵다.
- 자기 함정-고통스러워도 방향을 바꿀 의지가 필요하다.

FIS 재정도움센터

한국재정정보원은 권역별로 7개의 재정도움센터 운영을 통해 재정정보시스템(dBrain+, e나라도움) 맞춤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교육, 지역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정보시스템 교육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e나라도움 사용자분들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5년 8월 수원재정도움센터를 신규 개소 했습니다. 많은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정도움센터 기능

교육 운영

- e나라도움, dBrain+, 재정교육 등 정기, 맞춤교육 운영
- 정기교육을 통해 교육 불균형 해소,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현장점검 지원

지역 협력

- IT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 보조사업자 업무지원

지자체 협업

- 지역발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재정도움센터 연혁

2020

대전, 광주, 대구
재정도움센터 개소

2021

한국재정정보원
고객지원실 신설

2022

강릉, 부산
재정도움센터 개소

2023

dBrain+, e나라도움
통합 교육 사업 운영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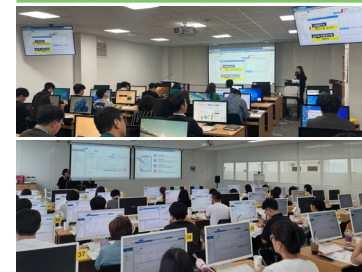
서울
교육센터(명동) 개소

2025

수원
재정도움센터 개소 (25.8.)

재정도움센터 활동

사용자 교육



미래세대 재정교육



지자체 협업



권역별 재정도움센터 안내

서울 dBrain+·e나라도움 교육센터(서울·경기·인천 권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10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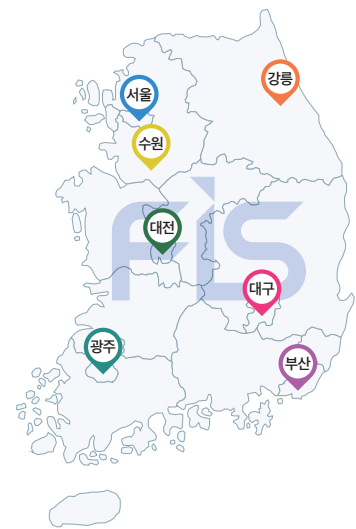
☎ 전화번호 dBrain+ 02-6367-6400

e나라도움 02-6367-6401

지 하 철 4호선 명동역 8번 출구, 도보 1분

버 스 명동역 세종호텔 또는 명동 하차

알고 싶은 나라살림
알기 쉬운 재정교육
한국재정정보원이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릉 재정도움센터(강릉·강원 권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울곡로 2806, 한화생명빌딩 10층

☎ 전화번호 033-641-8405

지 하 철 K T X 강릉역 1번 출구, 도보 20분

버 스 교보생명 또는 남대천·강릉교 하차

대구 재정도움센터(대구·경북 권역)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0층

☎ 전화번호 053-427-8405, 053-428-8405

지 하 철 1호선 2호선 반월당역 14번 출구

버 스 약령시 앞 또는 약령시 건너 하차

부산 재정도움센터(부산·울산·경남 권역)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관정빌딩 2층

☎ 전화번호 051-466-8405, 051-467-8405

지 하 철 1호선 부산역 2번 출구, 도보 10분

K T X 부산역 1번 출구, 도보 10분

버 스 부산역 또는 영주동 하차

대전 재정도움센터(대전·충청 권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69, 교보생명빌딩 3층

☎ 전화번호 042-221-8405, 042-222-8405

지 하 철 1호선 중구청역 3번 출구

버 스 중구청역 하차

광주 재정도움센터(광주·전라 권역)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자로 268, KDB생명빌딩 30층

☎ 전화번호 062-368-8405, 062-369-8405

지 하 철 양동시장역 1번 출구, 도보 6분

버 스 양동시장역 또는 양동북개소빌딩, 천교 하차

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8월 13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재정원 본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새롭게 제정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위기 대응체계에 관한 토론 훈련과 백업시스템 가동 훈련을 병행하였다. 특히 정보시스템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상황을 가정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 역량을 점검하였다. 올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원의 재해복구 훈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석호 원장은 “이번 훈련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중요한 기회였다”라며,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무장애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개도국 재정공무원 대상 재정정보시스템(FMIS) 역량강화 초청연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025년 개도국 재정공무원 재정정보시스템(FMIS,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아제르바이잔, 쿼제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부탄 등 5개국에서 총 12명의 재무부 소속 공무원이 참가했다. 재정원은 참가자들에게 성공적인 재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각국의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윤석호 원장은 “이번 연수는 참가국들이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피드백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며, “재정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참가국과 나누고 협력국의 재정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uiz

재정 당국이 국가 예산의 지출 총액과 부처별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스스로 예산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은 예산제도는?

- ① Bottom-up 예산제도 ② 주민참여 예산제도
- ③ Top-down 예산제도 ④ 품목별 예산제도



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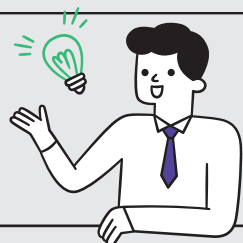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응모

좌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5.9.25.~10.15.



» 지난호 정답 : FIS 사이버 보안관제

» 지난호 퀴즈 당첨자 010-****-4760 010-****-5467 010-****-6499
 010-****-0977 010-****-5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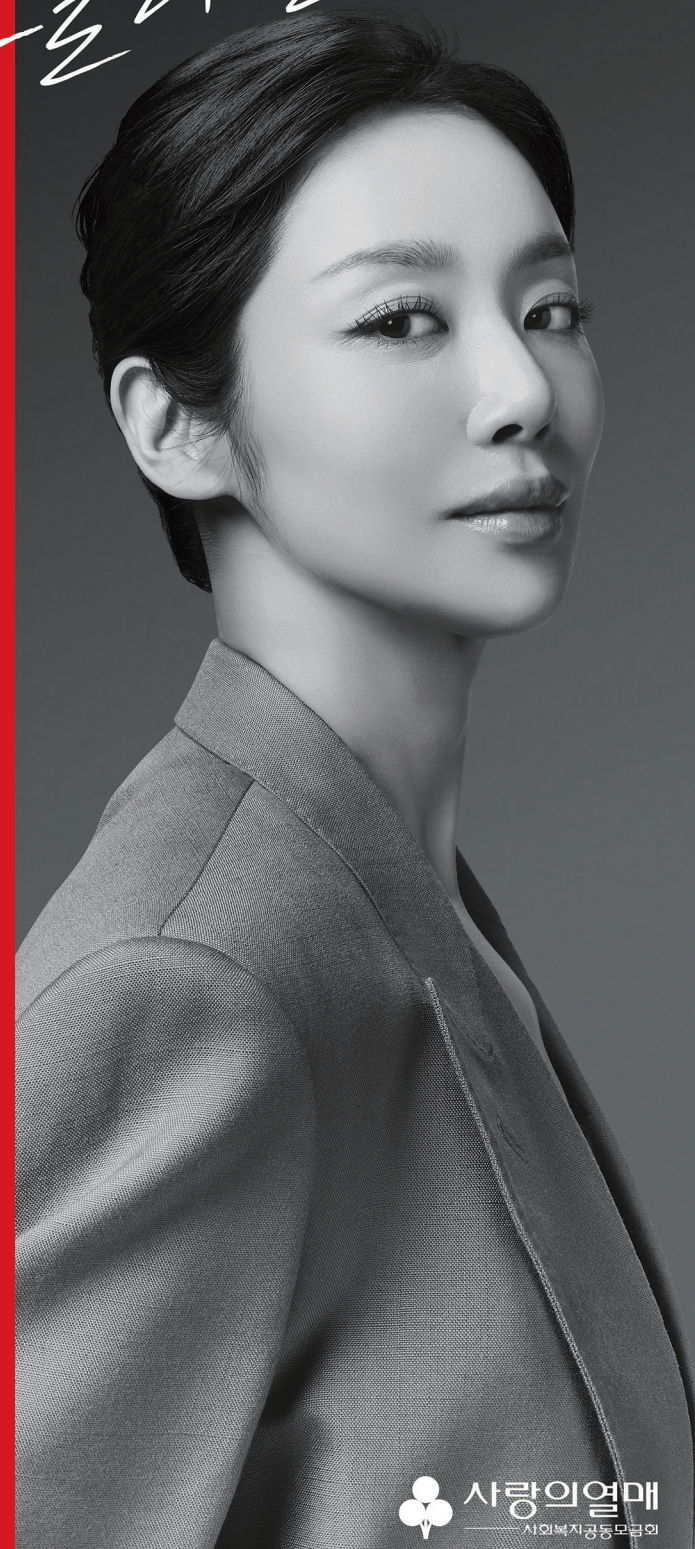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 『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월간 [나라재정] 구독자 설문조사

지난 한 해 동안 월간 [나라재정]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월간 [나라재정]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QR코드로 접속해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요!
나처럼 살건지!
모처럼 살건지!
나같이 살건지!
모달리 살건지!





IPC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Seoul 2025

2025 서울 IPC 정기총회

24 - 27 September 2025

DAY 1-2 | Conference

DAY 3-4 | General Assembly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Host |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Organizer |  KOREA 
 KOREA 

Financial Suppor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SPF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